

第282回國會
(臨時會)

環境勞動委員會會議錄

第 1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9年4月15日(水)

場 所 環境勞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환경부 소관
 - 나. 노동부 소관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가. 고용보험기금
 - 나. 근로자복지진흥기금

審査된案件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 가. 환경부 소관
 - 나. 노동부 소관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 가. 고용보험기금
 - 나. 근로자복지진흥기금

(10시17분 개의)

○**委員長 秋美愛**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방건환** 입법조사관입니다.

2009년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발생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환경부 및 노동부 소관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가뭄극복사업, 생태복원 및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며, 노동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일자리 나누기 지원, 청년 고용 촉진,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촉진과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등을 목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본래의 편성 목적에 부합되는지, 그리고 충실하게 집행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셔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일괄 상정하되 오전에 환경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 이어서 노동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환경부 소관

나. 노동부 소관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고용보험기금

나. 근로자복지진흥기금

(10시20분)

○**委員長 秋美愛**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및 노동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노동부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부장관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존경하는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2009회계연도 제1회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어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결손 보전 11조 2000억 원, 그리고 세출증액 17조 7000억 원 등 총 28조 9000억 원 규모로 경기 회복 촉진과 성장 잠재력 확충으로 일자리를 유지·창출하고, 저소득층 생활 안정 등 경제 위기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 소관은 첫째 녹색뉴딜 및 환경기초시설 조기 완공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의 질을 이룩하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하수처리장, 생태하천 복원 등 8개 사업에 4252억 원, 둘째 최근 극심한 가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가뭄지역 관정개발, 노후 수도관망 진단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 등 2개 사업에 1307억 원, 그리고 셋째 국립공원 지역의 생태건강성과 종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숲생태 개선, 생태축 복원, 도서 녹색숲 복원 등 국립공원 일자리 사업에 468억 원 등 총 11개 사업 6028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자체 수요조사와 철저한 집행 가능성 검토를 거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자체 추경 독려, 집행 실태 점검 등을 통해서 예산이 전액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우리의 소중한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경제 위기 극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를 부탁 올리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기획조정실장 문정호** 기획조정실장 문정호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서 2009년도 제1회 환경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정부 추경안 개요, 환경부 추경안 개요, 사업 총괄, 세부사업별 설명 자료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정부 추경안 개요입니다.

세입결손 보전 11조 2000억 원과 세출증액 17조 7000억 원 등 총 28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4조 2000억 원, 고용유지·취업기회 확대에 3조 5000억 원, 중소·수출기업·자영업자 지원에 4조 5000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 원, 미래 대비 투자에 2조 50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환경부 추경예산안 개요입니다.

환특회계 10개 사업과 균특회계 1개 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60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이유로는 녹색뉴딜과 환경기초시설의 조기 완공으로 환경 질 개선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수처리장 확충 등 8개 사업에 4252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 등 가뭄대책 추진을 위하여 2개 사업에 1307억 원, 국립공원 지역의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생태 복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4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사업 총괄은 표로 같음하고, 4페이지의 세부사업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입니다.

본예산 50억 원에 이번에 200억 원을 증가시켜서 추경으로 2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 개요는 상수도시설이 부족하고 지방 재정이 열악한 중소도시에 국고를 융자해서 상수도시설을 확충·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며, 사업비의 50~70%를 융자

하고 있습니다.

추경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충청북도 청주시 정수장 현대화사업 비용을 용자·지원하기 위해서 국고 10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강원도에 태백·삼척·정선·영월 등 가뭄지역의 상수도 관망진단사업 비용으로 10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동 사업의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보면 지자체의 수요조사를 통해 금년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한해서 용자·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현재 3월 말까지 당초 예산의 교부액 대비 지자체 실집행률은 50%로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본예산 640억 원에 이번에 1107억 원을 증가시켜서 추경으로 174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 개요는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2014년까지 전체의 약 34.4%를 개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국고보조를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경편성 사유는 가뭄으로 인한 취수원 고갈과 자연방사성물질의 검출 등 수질기준 초과시설, 노후시설 등을 개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을 할 경우에 사업목표가 당초 2014년에서 2012년까지 단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가뭄 등으로 상습적으로 취수원이 고갈돼서 제한·운반 급수를 하는 지역과 시설노후화 및 수질기준 초과 지역,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지역 등 총 10개 지방자치단체에 1543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것으로 110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본 사업의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보면 2009년 3월 말 현재 교부액 대비해서 실집행률이 29.8%입니다. 이것은 다소 부진한 내용입니다마는 가뭄지역으로 인해서 대상지를 변경함에 따라서 3월 말까지는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원체 본 사업이 사업공기가 3~5개월로 짧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요구가 많은 상황으로 상반기 내에 조기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표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본예산 4990억 원에 이번에 869억 원을 추가하여 5859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수관거정비를 통해서 수질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원조건은 신설 및 교체사업의 경우에 30~70%, 보수사업의 경우에 10~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경편성 사유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금년도에 645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마는 재원이 부족해서 4990억 원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을 감안해서 일부를 감액했고, 또 전체 사업 중에 75개 사업의 기간을 1~2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충분히 반영을 못 한 상황입니다.

추경 사업내용을 보면 57개 지방자치단체에 77개 사업, 218km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반영했습니다.

동 사업의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은 당초 집행 가능한 103개 사업에 1571억 원의 추경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여전히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77개 사업에 869억 원만 반영한 상황입니다. 현재 집행상황을 보면 3월 말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이 87.3%로 매우 양호한 수준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로 같음하고,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2065억 원에 796억 원을 추가하여 2861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 사업 개요를 보면 충주댐 등 7개 댐 상류지역에 하수도시설을 설치해서 상수원 보호와 수질개선을 하는 것으로 2011년까지 댐 상류지역 하수도 보급률을 75%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읍 이상 지역은 70%, 면 이하 지역은 80%가 되겠습니다.

추경 편성 사유는 2007년도에 사업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때 계획된 연차별 투자계획 중에 금년도 예산에 미 반영된 796억 원을 추가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사업기간의 재연장 등으로 인해서 공사 중단이나 사업비 증가, 주민불편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자체별 실수요를 조사해서 375개 시설에 대해서 공사추진 정도에 따라서 796억 원을 차등 반영하였습니다.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은 3월 말 현재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이 98%로 매우 양호하고, 향후 지자체에 추경 독려 등을 통해서 전액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로 같음하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입니다.

본예산 956억 원에 421억 원을 추가하여 1377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개요는 하수도 서비스가 열악한 농어촌 마을 하수도를 정비함으로써 수질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지원조건은 시·군 70% 수준이고, 사업 목표는 2012년까지 보급률을 64%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추경 편성 사유는 금년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97개 사업에 421억 700만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주로 계속사업에 대한 추가지원과 내년도 완공사업에 대한 조기지원을 중점으로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계속사업의 경우에 경남 김해시 용곡 등 54개 사업 220억 원, 2010년도 완공사업 인천시 옹진군 서포리 등 30개 사업에 137억 원,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서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이 경남 양산시 등 13개소 62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 내 집행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신규사업의 경우 설계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반영하였고, 계속사업 등에 적극 편성함으로써 집행 가능성을 최대화하도록 했습니다. 3월 말 현재 교부액 대비 실적행률은 55.6%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로 같음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입니다.

본예산 5344억 원에 이번에 682억 원을 추가하여 총 6026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 개요는 하수처리장 확충을 통해서 전국 하천·호소의 수질개선과 생활환경개선을 하는 것으로, 지원조건은 광역시 10%, 시·군 50%, 면 단위 이하는 70%, 주한미군공여지역과 방폐장 주변지역은 80%까지 다양합니다.

사업목표는 2012년까지 하수도 보급률을 91%까지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추경 편성 사유를 보고드리면, 재원 부족 등으로 인해서 기 추진 중인 계속사업의 준공시기가 연장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시설의 적기 완공과 해양투기가 금지된 하수 찌꺼기의 육상처리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하수도 예산 부족으로 준공시기를 연장한 울진 슬러지처리시설 등 7개소에 85억 원, 2010~2012

년 완료예정 사업 중 사업진도와 집행이 원활한 강릉고도처리시설 등 55개소에 59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연도 내 집행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3월 말 현재 실적행률이 98.2%로 매우 양호하고,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서 계속사업 중에서 연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만 선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예산 950억 원에 이번에 860억 원을 추가하여 총 1810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 개요는 퇴적오니준설과 우수·하수 분리, 하상여과시설 설치와 습지 등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수생식물 식재 등 생태하천 복원을 하는 것입니다. 지원조건은 광역시는 50%, 시·군은 70%입니다. 사업목표는 2015년까지 훼손된 지방하천의 25%인 3019km를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경 편성 사유는 지자체의 수요와 대비해서 예산이 크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사 중단이라든지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 지역주민 불편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필요 예산이 2000억 원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950억 원만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의 사업내용은 광주천 등 전국 43개 하천사업에 대해서 진도별로 추가예산을 지원토록 반영하였습니다.

연도 내 집행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서 금년에 완공 가능한 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하였고, 당초 예산이 상반기 중에 65% 이상 집행이 완료될 예정이고, 또 향후 하반기 중 추경예산을 전액 집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월 말 현재 실적행률이 83.3%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고,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조기집행에 따라서 상반기 중에 완료되는 사업이 상당수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예산 648억 원에 이번에 114억 원을 추가하여 총 762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 개요는 한미 FTA 체결 대비한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2012년부터 금지되는 해양배출에 따른 처리대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시·군·구 80%, 광역시 60%입니다. 사업목

표는 2012년까지 공공처리시설의 분담률을 12.2%로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추경 편성 사유는 금년도 완공소요분과 내년도 완공예정사업 중 공기단축이 가능한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금년 준공사업비 반영사업이 영천시 35억 원, 천안시 26억 원이며, 내년도 준공예정사업 중 공기단축이 가능한 장수군 23억 원과 임실군 2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도 내 집행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며, 3월 말 현재 실집행률이 47.7%입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민원 해소와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6월까지 전액 집행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폐기물 자원화사업입니다.

본예산 422억 원에 이번에 74억 원을 추가하여 총 49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 개요는 단순 소각·매립하던 생활폐기물을 에너지자원화 하는 사업내용으로서 자치단체 보조율은 30~50%이며, 사업목표는 2013년까지 다양한 자원화시설 88개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인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과 나주·부산의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동대문과 속초의 유기성폐기물 처리시설, 구미와 마산에 매립가스 자원화시설 이런 조기완공이 가능한 7개 사업을 중심으로 계속비와 잔여금을 반영했습니다.

연도 내 집행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3월 말 현재 실집행률이 32.2%입니다. 인천은 4월 16일, 동대문은 4월 20일 기성금이 실제로 집행 예정이고, 구미 마산도 6월까지 착공 내지는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 확충입니다.

본예산 887억 원에 435억 원이 증가된 총 1322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개요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716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원조건은 30% 내지 50%가 되겠습니다.

추경 편성 사유는 재원부족으로 인해 적정 사업비를 지원하지 못해서 정상적인 추진시기보다 완공목표 연도를 1년~2년 지연시킨 사업을 정상

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12개의 소각시설과 5개의 매립시설, 4개의 비위생매립지 정비 등 조기완공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은 3월 말 현재 실집행률이 59.5%로 정상 추진 중이고, 소각시설은 대부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4~5월까지 전액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국립공원사업입니다.

본예산 920억 원에 468억 원을 추가하여 총 1388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편성 사유는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전과 훼손지 복원사업을 통해서 일 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국립공원 숲 생태 개선사업으로 인공조림지의 외래수종을 정비하고, 또 2200ha에 대해서 숲 생태계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국립공원 생태축 복원정비사업으로 백두대간 중 훼손된 생태축 탐방로 23km를 주변과 조화되도록 복원·정비하고, 생태체험학습관 1개소를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도서 녹색 숲 복원 사업으로는 염소 등으로 인해서 황폐화된 국립공원 도서지역의 숲 생태계를 복원하고, 염소 약 1400개체를 구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립공원의 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종 다양성 증진, 또 1715명 정도의 일자리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도 내 집행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연도 내 집행을 위해서 현재 녹색뉴딜 TFT를 구성하였고,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19개 공원과 26개 사무소 및 1개 센터에 예산을 배분해서 연도 내 집행이 되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길** 지금부터 환경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환경부 소관 추경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나 집행 시 고려사항이 있다고 보여지는 5개 사업에 대해서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중소도시에 국고를 용자하여 상수도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가뭄대책 추진을 위하여 200억 원을 증액하여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상세내역을 보면 강원 태백권 관망진단 사업비용을 위하여 100억 원, 충북 청주시 정수장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100억 원을 각각 계상하고 있습니다.

강원 태백권은 최근 가뭄으로 제한급수를 시행하는 등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있는 지역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관망교체 사업이 힘들다는 점에서 긴급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망진단의 결과가 노후수도관 개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 등 후속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청주시 정수장 현대화 사업은 청주시 영운정수장과 지북정수장을 통합 현대화시설로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에 토지보상과 실시설계 이행 후 12월이나 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할 만큼의 시급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가뭄대책 추진을 위하여 1543개소 개량을 목적으로 1107억 3200만 원을 증액하여 1747억 3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상수도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대하여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이므로 우선적으로 재원이 투자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또한 최근 가뭄 발생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관정개발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작업은 공기가 짧아 평균적으로 3~5개월 안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이므로 추경예산 대상사업으로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사업개소수가 많아 국고지원 대상시설의 선정 등 예산 편성·집행상의 효율성

도모와 관정개발 실패 시 폐물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네 번째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다섯 번째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문제점이 적은 사업으로 보아 유인물로 같음하고, 여섯 번째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그간 이·치수 위주의 하천정비사업과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시민과 야생동물 위주의 수생태계 건강성 보전사업으로 전환하여 퇴적오니준설, 우수·하수 분리, 수생식물 식재 등을 통해 하천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사업입니다.

환경부는 2002년부터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생태하천 만들기 10개년 계획을 통해 2015년까지 훼손된 지방하천의 25%인 3019km의 복원에 1조 4488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국고 8542억 원, 지방비 4794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2009년도 본예산은 아래 표와 같이 총 90개 사업에 950억 27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는 광주천 등 43개 계속사업에 본예산의 90.5%인 860억 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각각의 하천별로 상황이 다르고, 홍수 등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사전 계획 단계에서 충분한 사업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수렴, 전문시공사의 선정 등이 필요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평가 및 환류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간 추진되어온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보면 일부 사업에 있어서 생태복원 취지에 벗어난 조경사업화 경향, 유지용수의 인공공급에 따른 논란, 사후평가 및 환류체계 미흡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일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하천 생태복원이라는 당초의 취지에 벗어나 조경사업으로 흐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생태복원을 통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대하는 것도 사업목적에 부합된 것이 사실이나 단기간에 생태하천이라는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조경사업 방식으로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과도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물론, 하천의 자연스러운 자정·복원능력을 오히려 훼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천 유지용수를 인공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생태성의 회복이라는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것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자체가 봉착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유지용수의 부족으로 인한 건천화와 수질악화 문제입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다음 페이지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문제를 인공적으로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해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공적 유지용수의 공급은 건천화 상황에서 일견 불가피한 해결책으로 보일 수 있으나 생태성 회복이라는 사업의 근본취지 및 지속가능성 유지비용 등을 고려해볼 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이 사업의 완료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국비 기준으로 4284억 원을 투입하여 총 565km를 복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부 수질개선 실적에 대한 단편적인 평가 이외에 완료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없었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문제점과 함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특성상 평가·환류의 중요성이 어느 사업보다 큰 사업임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평가·환류의 미흡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기존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생태성 회복에 중점을 두는 방향을 조정 재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 사업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전문가 등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7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8번 쓰레기처리시설확충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아홉 번째 폐기물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자원화 사업은 단순 소각·매립 또는 해양 배출되는 폐기물에서 자원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폐기물자원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09년도 제1차 추경에서는 본예산 421억 8400만 원의 18%인 74억 2800만 원이 증가한 496억 1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에너지화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동 사업은 에너지 문제나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단으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폐기물자원화 사업 중 전처리 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광역화 측면, 환경성 측면, 경제성 측면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소각시설의 광역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폐기물소각시설 중 광역시설의 경우 타 지역 폐기물의 반입을 반대하여 시설의 가동률이 낮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결국 이 문제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의 광역화와 관련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업은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광역화 및 집중화에 대한 문제 해결이 전제되어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을 보입니다.

둘째, 환경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폐타이어 등 산업폐기물을 시멘트소성로의 부연료로 사용하여 환경오염 문제 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RDF도 전용발전시설과 같은 안정적인 수요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쓰레기소각시설과 그 성격이 다른 시멘트소성로, 발전소 등 에너지 수요가 많은 산업계에서 부연료로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사용하는 지역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제성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생활폐기물에 함수율이 높은 경우 RDF 제조 시 별도의 건조비용이 추가되어 시설운영비가 증가하게 되고 생활폐기물에 음식물·종이류 등 유기물이 많으면 연료로서 기준열량을 충족하지 못하여 메탄가스 발생으로 보관 시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나 예산심사 시에 생활폐기물의 고형연료화 사업의 비용 문제가 지적된 바 있듯이 이와 같은 처리방식은 폐기물에너지화를 위하여 또 다른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폐기물 건조에 따른 비용까지 추가되어 RDF의 경제성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의 확대는 현재 운영 중인 원주의 전처리시설,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전처리시설의 운영실

태, 향후 설립 예정지인 지역의 합수율, 성성별 발생량 등 기초 자료의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경제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책효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이루어진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공원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도서의 녹색 숲 복원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의 녹색 숲 복원사업은 국립공원 지역 40개 도서 내 야생화된 염소를 구제하고 90개 도서의 녹색 숲을 복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방목가축 구제에 3억 원 도서 녹색 숲 복원에 197억 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방목가축 구제에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국립공원 내 방목가축은 52개 섬에 약 1600마리의 염소 등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에 의한 생태계 및 경관 파괴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구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 2008년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체현장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지적되었듯이 방목가축 구제의 경우 그 방식에 있어서 도서의 지형 특성, 접근성, 포획 방법, 장비, 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인 바 해외 성공 사례 등의 분석이 면밀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도서의 녹색 숲 복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방목가축 서식으로 인한 훼손도서 및 인간의 자연자원 채취 등에 의한 훼손도서 내에 고유 수종 및 멸종 위기에 있는 식물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인위적으로 도서 생태계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본 사업 자체가 또 다른 생태계 교란과 자연파괴 요인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무인도의 경우 인위적 숲 복원의 급박성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연 상태에서의 식생 회복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일본 오가사와라 군도의 염소 구제 사업의 경우에도 인위적인 숲 복원 사업은 없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숲의 훼손 정도가 커서 인위적 복원이 필요불가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서별 별도 설계 용역 등을 통하여 각 도서 특성에 따른 식생과 복구 방식에 대한 연구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秋美愛**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간 협의로 위원님 1인당 토론 시간은 10분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조해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해진 위원**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조해진 위원** 그런데 여러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환경부의 평가·환류체계가 미비하다는 게 최종 결론인 것 같거든요. 이 지적을 비롯해서 가지고 조금 전에 수석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우선 과거의 하천복원 방식과는 달리 하천의 건강성 가능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생태가 곧 지역주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까지 확대되는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미흡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더 보완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수궁을 합니다. 전문가들의 참여를 좀 더 확대하고 지역주민들의 아이디어도 많이 수렴을 해서 생태하천 복원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하천의 특성이나 또는 하천의 위치 그리고 하천 주변 주민들의 요구 등이 매우 다양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전형적인 프로그램화가 쉽지 않은 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 주무부처로서 전문성을 많이 갖고 있는 환경부가 산하 전문가와 전문연구자들의 의견 그리고 그동안 실시해 온 몇 가지 시범사업의 성과 등을 감안해서 보완해 나가고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책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거든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조해진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는 지적

이 안 돼 있지만 사업비 지원만 가지고는 안 되고 보상비 지원이 돼야 현실적으로 사업비 지원 집행도 가능하다는 문제도 있고 또 생태복원 대상인 하천이 원래부터 생태하천이었는가 그걸 다시 복원하는 사업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의 친수 수요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조해진 위원** 친수환경이 아주 풍부하고 좋은 데하고 그런 게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거주민들이 친수환경 친수공간에 대한 수요를 많이 느끼는 것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부 지원으로 그게 만들어지고 난 뒤에 사후관리를 지자체가 계속해야 되는데 그게 또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지자체가 그걸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또 능력이 안 돼서 사후관리도 나중에 환경부에 의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야 되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보면 환경부가 꼼꼼하게 생태하천의 디자인 설계부터 해 가지고 사후관리까지, 그냥 사업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구상부터 완료해서 그 이후에 운영되는 과정까지 환경부가 꼼꼼하게 살펴서 원래 사업 취지에 맞게 그래서 예산 지원이 효과가 있게 해야 된다는 그 취지에 저는 동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걸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공표가 되지 않았습시다마는 하천의 건강성과 생태 회복을 위한 전문가 내지는 전문기관의 종합적인 기획연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연구결과를 충분히 반영해서 투자 성과가 나타나고 특히 추경 예산이라고 하는 그 특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예,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조해진 위원** 이 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국토부나 여타 다른 부서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는가 하는 부분이 제가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지하수 암반관정이라든지 수질측정용 지하수관정 같은 경우에 식수지원용으로 전환해서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중복은

없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소규모 상수원 내지는 수도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은 환경부의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목표로 설정하고 또 설계하고 추진하는 사업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비상시에 저희가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재해대책 홍수조절 등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기 때문에 환경부가 추진하는 먹는 물 또는 수질 위주의 사업과는 중복되지 않으면서 만일의 경우 비상시에 국토부 사업도 환경부가 끝어다가 먹는 물 차원으로 쓸 수 있는지의 검토는 별개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폐관정 관리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폐관정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어느 누구도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가뭄 때마다 또는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마다 관정을 굴착 또는 개발해 놓고 목적이 달성되거나 가뭄이 해소되어 버리면 사후관리에 예산을 투입하거나 인적자원을 투입하지 않고 방치해 버리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폐관정에 대한 일체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을 다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가뭄과 관련해서 환경부가 개발하고 있는 관정에 대해서는 그러한 과거의 폐해를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타 부처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저희 지역구에 가 보면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마을마다 공고를 붙여 놓고 신고를 받고 있거든요. 관정마다 관정구경이 몇 m 이하면 하나 신고하는데 얼마 준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던데 환경부는 그런 계획은 필요하지 않은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저희들이 시도에 부지사·부시장회의를 1년에 한 번 이상 개최를 하면서 그러한 실질적인 협력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달에 또 그러한 회의를 개최해서 챙길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가뭄 대책으로 관정을 꽤 많이 봤는데 만일 그 가뭄이 금년 여름 중에 해소가 되면

사후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느냐가 결정적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그러한 일종의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공고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토록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앞으로 폐관정 처리와 관련해서 보완적인 사항이 필요할 때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이 필요할 때는 다시 예산을 배정해 주도록 건의도 올리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리고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의 경우에 노후관 교체를 비롯해 가지고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관망진단이 주요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이것은 지금 당면한 식수난을 해결하는 데 직접적으로 효과를 가져오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우선 태백지구 4개 시군의 경우에 너무 심각해서 관망진단비를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노후관을 개량하는 것이 식수난을 해결하는 첩경 중의 하나인데 그 전제가 관망진단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양해진 관망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이번 관망진단 사업을 해 보고 그 결과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또 관망 자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것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리고 하수도 사업도 제가 죽 보니까 상수도 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하고 거의 유사한 문제가 있는데요. 보급률에 있어 가지고도 편차가 심하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장의 가동률이 78%선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처리원가하고 요금하고 격차가 커서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하수 시설사업 총 부채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원래 하수시설의 목적이 상수도 이용한 걸 가지고 다시 처리를 해서 하천 유지용수나 농업용수나 이렇게 재이용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하수처리수의 재이용률이 10%도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추경 사업은 주로 하수도 사업……

1분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예.

○**조해진 위원** 하수도 사업 조기 확충 쪽에 예

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런 하수도 사업의 구조적인 비효율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예를 들면 상수도같이 그렇게 광역화를 추진한다든지 하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수질개선에 있어서 제일의적인 사업인데 그동안 한국 전통적 사고로는 '상수도 우선, 하수도 후순위'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하수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많은 지자체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앞으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고 하수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위원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희입니다.

지금 추경안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많은 부분에 저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부분을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조해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노후수도관망 사업 부분들이 너무 늦었다, 그리고 시급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후속조치가 꼭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가뭄 지역의 노후관망 개선사업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청주시정수장 현대화사업은 전문위원 지적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009년도의 사업계획상 토지보상과 실시설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게 추경을 편성해야 될 시급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권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본예산 편성 때 이 사업이 좀 늘어났죠?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김상희 위원**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는 거의 본예산에 육박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지적대로 이게 지금 환류·평가가 될 단계에 와 있다, 그리고 특히 인공용수를 가지고 유지용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 없이 너무 이렇게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편성에서 하천복원사업 부분은 신중하게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그리고 지금 평가와 관련해서 연구라든가 이런 예산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폐기물자원화 관련해서는 특히 RDF와 관련해서 환경성이나 경제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너무 많이 추경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자원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립공원 생태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인공조림을 통한 인위적인 생태 개선이 국립공원의 생태계 보존을 위한 적절한 방법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연구와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추미애 위원장, 조원진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도서 숲 복원사업의 경우에도 인공조림과 마찬가지로 인위적으로 이것을 복원하는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서 숲 복원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지금 이런 일이 여러 군데 도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소위에서 검토를 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장관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석면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석면 긴급토론회를 하다가 왔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정말 석면쇼크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현장이나 건축물이나 이런 환경이나 광산 이런 것에서 지금 생활용품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생활용품과 관련해서 환경부가 지금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석면에 관하여 지금까지

정부의 관리체제가 환경부로……

○**김상희 위원** 환경부가 중심이 돼 있죠?

○**환경부장관 이만의** 처음부터 일원화되어 있었더라면……

○**김상희 위원** 일원화는 안 돼 있었지만……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니,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나마 관심을 갖고 한 때는 환경부죠?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일원화되어 있었다면 저희들이 여러 영역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접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노동부가 작업장과 그 근로자 중심으로 접근을 하면서 석면 문제가 점점 주민건강 내지는 질환으로 나타나고 그 과정에 저희들이 환경성 질환 내지는 환경보건 차원에서 다뤄야 되겠다 해 가지고 최근에 환경부 소관으로 관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체제상으로는 약간 미흡한 실정이고요.

이번에 화장품이나 식품과 관련해 가지고 제기된, 말하자면 가공된 석면이 야기하는 2차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환경부로서는 지금까지도 관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석면 문제를 환경부가 인식하면서부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를 해 왔는데……

○**김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한번 같이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석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부는 노동부하고 환경부입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김상희 위원** 그리고 특히 노동부는 작업 현장이지만 환경부는 환경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지금 가정용품의 석면 함유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김상희 위원** 그런데 그걸 발표하지 않으셨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김상희 위원**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그냥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게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상희 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환경보건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생활공해와 관련해서는 워낙 환경부 소관이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로 일원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손을 쓸 수 없었다 내지는 대책을 세울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환경부로서는 상당히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석면과 관련해서 가장 경각심을 갖고 연구도 하고, 그리고 지경부나 보건복지부가 석면 관련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하고 또 추동을 해야 되는 것이 환경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공포에 떨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공건물의 석면 함유실태 조사 연구를 하셨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김상희 위원** 그런데 연구 후에 발표를 왜 안 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김상희 위원** 발표하실 겁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왜냐하면 아직 최종적으로 보고가 안 나왔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는 왜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주춤주춤하는지 모르겠어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닙니다. 워낙……

○**김상희 위원** 지금 환경보건, 생활공해와 관련해서 환경부가 주무 부처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유해물질과 관련해서 그것의 관리책임자는 환경부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하시면서 지경부도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하고 복지부도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환경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 연초에 1월 달에 석면 폐광산 관련해서 정말 전국이 떠들썩하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2009년 예산에 55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환경부에 문의한 바로는 석면 광산 건강영향조사 50억을 예비비로 확보해 뒀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는 편성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석면 관련해서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를

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는 사업이 이번에 환경부의 추경 편성에 마땅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넣지 않았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관계 부처 소관 기능과 관련해 가지고 검토해 주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되고 석면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김상희 위원** 자꾸 시스템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기에……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통합적인 시스템은 없으나 유해물질과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주무 부처 아닙니까? 환경부가 주무 부처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보건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것이지 석면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루도록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경부에 유해물질과 관련해서 지경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정보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고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이번에서야 비로소 정부 차원에서 관계기관이 어디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그 기관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따져서 토의를 하고 환경부가 총괄적으로 통합적인 노력을 하자……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미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이번에서야 결정이 된 겁니다.

○**김상희 위원** 가정용품의 석면 함유실태를 환경부가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러니까 환경부가 그런 부분을 해 왔는데……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환경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지 않았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러니까 환경부로서는……

○**김상희 위원** 그러면 빨리 해서 복지부나 지경부나 다른 부처들이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것이 과거에는 석면의 잠복기간이 30년, 40년 걸리다 보니까 문제가 실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화되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이 부처 저 부처에서 관련사항을 느끼게 되고 통합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환경부로 통합을 한 겁니다.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요. 저는 환경부가 유해물질에 관해서는 가장 주무 부서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석면은 이미 87년도에 유엔에서 발암물질로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환경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다른 부처가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하고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해야 되는 게 환경부의 주무 역할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전 기준도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닙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김상희 위원** 그걸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환경부가 그런 얘기를 하기도 어려웠지만 한다고 해도 아무도 수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원진** 김상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상희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관련해서 왜 추경에 연구라든가……

○**환경부장관 이만의** 저희가 예비비를 쓰기로 정부 간에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비비가 지금 50억입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러니까요, 서로 수요가 생기면 이 부분은 예비비를 쓸 겁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석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교육, 컨설팅 그리고 정책 수립, 모든 부분에서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과 또 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래서 이 부분은 석면에 대해서는 워낙 예전에 없었던 현안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는 걸로 기획재정부하고 합의가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는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김상희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부장관께서 지금 최근에 벌어지는 생활용품 속에서의 이런 석면 피해와 관련해서 추경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조원진** 장관님 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이만의** 이번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근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와 같은 공감을 바탕으로 해서 보완을 하고 앞으로 예산도 예비비를 쓰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가 되어 있는 만큼 예비비를 써서 금년에 최대한 일을 하고 만일 더 조치가 필요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원진**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李和洙 委員** 한나라당 안산 상록갑 이화수 위원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저소득층 건강영향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렇습니다.

○**李和洙 委員** 인체의 건강영향을 최소화하려면 태아, 어린이, 임산부 등 고민감집단과 저소득층에 대한 환경성 질환 관리대책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걸로 보거든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환경보건에 관한 한 존경하는 이화수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李和洙 委員** 이번에 정부가 상정한 추경안 중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이 약 4조 2000억이고 환경부 추경안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대개 수도권망에만 국한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않은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이번 추경의 근본 취지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자리를 얼마나 늘려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데 두어지다 보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종합적이고 좀더 폭넓은 지원방안을 강구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李和洙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저소득층, 그중에서도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투자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 증액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안산의 화정천, 수원의 서호천, 안양의 안양천, 이런 게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예산이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제 지역구 사업이라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추경안에서 안산 화정천의 경우 20억 원에서 8억 원으로 깎았어요. 이 부분 잘 좀 해주실 수 있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환경부로서는 20억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의를 한 것인데요. 존경하는 이화수 위원님께서도 애써 주시면…… 그 사업비가 반영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李和洙 委員**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원진** 이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서 강성천 위원님이 해 주시지요.

○**강성천 위원**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산불 나고 가뭄이 닥쳐서 환경부도 심려가 크시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가뭄이 심각해서 환경부로서는 한두 가지 걱정이 아닙니다. 특히 물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산불을 포함해서 환경자산에 대한 피해가 많이 걱정됩니다.

○**강성천 위원** 국립공원 피해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아직 큰 산불은 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량적으로 피해가 얼마 된다고 보고드리는 것은 제가 관련 통계를 아직 잡고 있지 못합니다.

○**강성천 위원**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감사합니다.

○**강성천 위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목적을 일자리 유지 및 창출과 민생안정 도모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맞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점과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09년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예산안 증액이 불충분하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장관님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공감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예산안 증액이 불충분한 문제점은 환경부의 추경예산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환경 부문이 중요한 건 사실인데요, 일자리 창출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사업을 책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강성천 위원** 환경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총 11개 사업 중에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은 국립공원지역의 공공근로사업 하나뿐이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가장 직접적인 사업은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방금 말씀을 올렸습시다마는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선 금년 중에 바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일보다는 전문성이 적더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

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5대강 지킴이, 국립공원 지킴이, 자연환경안내원, 보호지역 인근 주민감시원 등 총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래서 약 1200여 명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강성천 위원** 2009년도에 217억 원의 예산으로 1224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사회적 일자리는 산업별 고용창출 효과를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를 고려할 때 제조업은 물론이고 전체 산업 평균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유용한 수단일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사업이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또 일 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 효과가 경우에 따라서는 쉽게 포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은 고용유발계수나 또는 취업유발계수나 하는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천 위원** 아직은 부족한 수준이지만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4개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이와 같은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까 존경하는 강성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 217억 원이 되면 그만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녹색 일자리 창출, 재활용품 분리 선별장의 확대 등을 통해서도 환경 부분에서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번 녹색뉴딜 정책으로 추진하는 단시적 내지는 한시적 일자리 창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 분야의 전문성이나 기술을 가지고 녹색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원진** 강성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권선택 위원님께서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택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감사합니다.

○**권선택 위원** 정부가 역대 최고 규모의 추경을 제출했습니다.

저희들도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규모 면에서 지나치게 큰 게 아니냐, 재정 건전성을 그만큼 해칠 게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경제정책에 대한, 경기 전망에 대한 예측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권선택 위원**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가 선 사과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장관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솔직히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 많은 연구기관도 있고 노력을 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맞이해서 예측했던 것들이 소용이 없게 되거나 또는 그 효과가 매우 줄어들어 버리는 바람에 이번에 부득이한 추경을 하게 되었고 결국 뉴딜이라는 이름이 말하듯이 정부의 역할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여야를 초월해서 이해해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선택 위원** 물론 필요성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런데 IMF 때도 사실 10조 남짓 했거든요. 그다음에 통합재정수지가 되면 22조까지 적자로 반전되거든요. 재정에 크게 문제가 닥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부도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장관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도 당장 기획재정부장관을 필두로 해서 어려운 경제 문제를 토의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일종의 위기관리 대책 회의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경제 기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추경 효과를 살림으로써 경제 위기를 구하고 우리 경제를 빨리 정상 성장궤도로 올려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비록 환경부장관이지만 경제마인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유념하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택 위원 정부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측을 잘 못했다는 점과 세계 경제 위기를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했다는 점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권선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환경부가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총 규모가?

○환경부장관 이만의 저희가 책정된 것이 6028억 원입니다.

○권선택 위원 요구는 얼마 했어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1조 원 가까이 했습니다.

○권선택 위원 60% 건졌네요? 그러면 많이 한 것입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왜냐하면 이것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부처에서 낸 것들을 비교하기 때문에 저희 환경부만 끝까지 옳다고 고집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선택 위원 추경의 기준이 있다면 시급성의 원칙, 집행 가능성의 원칙 등등이 있는데 아까 검토보고서가 아주 잘 되어 있던데 아까 이 보고서도 보았는데요, 집행 가능성은 검토를 잘 했더라고요. 그런데 시급성은 검토가 덜 된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을 다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아까 설명할 때 검토의견을 내 올렸는데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택 위원 추경의 가장 기본 원칙은 시급성이거든요. 불가피하게 추경을 통해서 그런 예외적인 조치를 취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시급성이거든요. 그런 원칙에서 본다면 좀 맞지 않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런데 저희가 환경부 차원에서 환경을 중심으로 보는 시급성도 있지만 수요 기관이고 또 신청서를 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는 시급성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절충해서 저희 안을 만들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권선택 위원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개별 사업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 이것은 용자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권선택 위원 가뭄 대책으로 강원도 쪽하고 일부 지자체에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본예산에서 논의가 됐는데 타당성이 적기 때문에 제외가 된 것이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런 것보다는 이번에 가뭄이 너무 장기간 심화되면서 바로 이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추경에다 반영을 해 드린 것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는 존경하는 권선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심화되는 것과 관련해서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하고 올린 것도 있습니다.

○권선택 위원 그러니까 가뭄이라는 것을 명분 삼아서 조금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도 포함시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을 많이 돌아다닙니다마는 가뭄 현장에서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한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고 왔습니다.

앞으로 관망 개량이 없이 물 공급이 원만하지 않고 그렇다면 가뭄이 또 올 경우에 참으로 어려운 결과가 예상이 되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권선택 위원 이번 추경은 정상적인 세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국채 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채 발행하는 것 다 빚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런데 이번 관망 개량 사업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보다도 훨씬 더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 공급 자체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지방에서 투자해 가지고 누수율이 높아 버리면 그것은 곧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가뭄

대책과 건실한 지역경제, 녹색성장 차원에서 이 사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선택 위원 좋고요, 하수관거 정비 사업 이것도 추경의 일반적인 원칙에는 안 맞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던데 지금 마무리 사업 완결 위주로 가야지 금년에 새로 착수된 것보다가 치중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하수관거 사업을 그동안 많이 추진을 해 오고 어떤 것은 BTL사업으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의 책정 과정에서 한꺼번에 다 하고 싶지만 예산과 내지는 관할 범위 문제 때문에 순위를 정해 놓았었는데 워낙 이번 경제도 어렵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되고 그러면서 가뭄 대책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수관거 정비 사업도 올려놓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지방행정 경험을 가지신 존경하는 권선택 위원님께서도 더 충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권선택 위원 재원 배분도 그래요. 본예산에 대개 많고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고 원칙인데 하수관거 사업을 보면 무려 3배 이상 많은 것도 있어요. 2배 3배, 이것은 재원 배분 원칙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사실은 하수관거 사업을 포함해서 지방에서 저희한테 신청한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한 사업 가운데 저희들이 집행 가능성과 아까 말씀하신 시급성 기준으로 선정을 한 내용이 그렇습니다마는 지역 간에 현재 상태가 좋지 않으면 않을수록 물량이 많아질 수 있음은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권선택 위원 예, 그 정도 하고요……

국립공원 사업 있지요? 그게 기본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사업 같은데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많이 염두에 두고 올린 거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솔직히 고백을 드리자면 일자리 창출을 몇%로 보느냐 이것을 따지면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측에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의견을 받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전문성이 없어도 바로 어려운 주민들을 써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권선택 위원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다루었던데 좀 부풀려진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정밀 검토를 해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을 좀더 정밀하게 검토해서 그러한 우려가 안 나오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권선택 위원 부풀려진 것 같은데요? 저도 읽어봤더니 목표치를 기준으로 했다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예산 확보된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고 더군다나 건설업을 기준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거 검토 내용이 맞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저희들이 그동안 공원사업과 관련해서 연구사업도 해 보고 시범사업도 해 보고 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뉴딜 성격을 고려해서 반영을 한 것인데 한번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선택 위원 됐고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원진 권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를 많이 양보해 주신 홍희덕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토론을 부탁드리 리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감사합니다, 위원님.

○홍희덕 위원 이번 추경에서 국고보조사업이 555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지방비는 얼마나 증액이 되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조원진 지방비가 30%이고 국고 지원이 70%인 경우가 이번 보조사업의 큰 흐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희덕 위원 어쨌든 국고보조사업이 모두 20개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지방비는 약 4162억 원이 증액이 될 것 같아요,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생태하천사업 등이 국고보조사업이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홍희덕 위원 이들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지자체에 조기 집행을 독려할 예정이십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지자체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 지원을 하고요, 지자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절차를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독려를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러면 가뜩이나 세수와 교부금이 줄어든 지방은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렇게 지원 건의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책정했기 때문에 지자체장으로서는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전제하고 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신뢰 위에서 책정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관계가 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자체가 상반기에 생태하천사업 등 국고 보조사업에 지방 예산을 쏟아 붓다가 보면 사회 안전망과 관련된, 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자율적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까도 답변을 올렸습니라마는 존경하는 홍희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 특히 경기가 어려웠을 때 그것을 보강하는 일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책정하면서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고 그 부분이 앞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집행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선정했다는 부분을 거듭 설명 올립니다.

○**홍희덕 위원** 이명박 정부의 환경정책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환경정책성과들이 퇴보하고 있는 것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천정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 공무원들도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하천 정책이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정책이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홍희덕 위원** 그런데 생태하천 사업을 통해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직 생태하천 복원 사업

이 최종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해서 답변 올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 하천이 지역과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선진화된 접근 내지는 추진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홍희덕 위원** 국토해양부의 생태하천 사업과는 우리 환경부가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국토해양부가 생태하천 사업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이런 정책 혼선들을 정리하고 나서 이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 저는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께, 지금 안 계신데, 제안을 드리면 환노위 차원에서 국토위와 간담회를 해서라도 국회 차원에서 부처 간 중복 사업인 생태하천 사업 문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마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큰 패러다임 차원에서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물그릇 키우기 사업도 단순한 토목 위주를 벗어나서 생태 지향적으로 가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생태 회복 사업은 환경부 고유 사업이고 법령으로 보더라도 환경부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이 있다면 이 부분은 저희 정부 간 노력은 물론이요 국회 차원에서도 조정을 통해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희덕 위원** 본 위원은 현재 하천의 건강성을 왜곡시키고 부처 간 혼선이 있는 생태하천 사업에 대한 추경 예산이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 해서 좀 삭감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이 일자리 추경이 맞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홍희덕 위원** 그런데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전부 이렇게…… 오늘 예산에 보니까 1억 원당 1.63을 곱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1.63이 취업유발계수가 맞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홍희덕 위원** 몇 년도 취업유발계수인가요, 이게?

○**환경부장관 이만의** 이것을 구체적으로 통계화해서 발표된 것이 2005년 한국은행 데이터입니다.

○**홍희덕 위원**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거기에 보면 1.66으로 나와 있는데 그동안 경기지수에 변화가 있고 또 취업 요구 자원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1.63으로 잡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정부의 녹색뉴딜 일자리 효과 96만 명이 나온 것도 이런 식으로 산출한 결과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일자리 창출 효과 중에서 아까 국립공원과 관련된 구체적 통계 포착이 가능한 사업과 같은 것은 쉽게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인원을 목표화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렇지 않고 SOC 같은 부분은 사업을 하면서도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지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를 인용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홍희덕 위원** 일자리 추경이라면 더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사업 분야별로 어떠한 인력이 몇 명 정도 투입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대략적으로라도 나와야 우리가 국회에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령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한 것처럼 이 정도의 일자리 산출 내역 과정이라도 나와야 이게 맞다, 틀리다 하고 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식으로 정말 일자리 추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심사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장관님은 사업별로 더 좀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효과의 근거를 제출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요구를 하고요.

특단의 일자리 창출이니만큼 국회에서 정기적으로 그리고 꼼꼼하게 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실적을 보고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저희들이 꼼꼼하게 구체적인 작업을 해서 가능하면 협의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05년도에 만들어진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SOC 부문에 대해서도 추정했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뉴딜…… 경제위기 차원에서 오히려 임금이 낮아지거나 또는 가장 실업을 구하기 위한 저임금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 창출 효과는 충분히 좋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합니다.

○**홍희덕 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숲 생태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 예.

○**홍희덕 위원** 정부에서 일자리 추경이라고 해서 단기성 일자리를 좀 억지로 만드신 것 같아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일자리 문제도 고민해야 하지만 국립공원의 건강성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숲 생태 개선 사업은 국회에 보고한 업무보고에도 없던 사업입니다.

왜 갑자기 긴급한 사업이라고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 저희들은 환경성 사업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을 겸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못 보신 것 같은데……

○**홍희덕 위원** 지금 식물 관련 학계에서 생태계 교란 식물조차도 임의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잘 모르고 계십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 아니, 저희들은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전문가 조언을 받아 보니까 교란 식물은 제거하는 게 좋다고 용역보고가 나왔습니다.

○**홍희덕 위원** 용역보고에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또 그런 의견도 한편에 있습니다, 분명히. 자연 생태계 스스로의 회복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 후자는 그런 의견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지금 정부가 단기성 일자리 창출에만 연연하고 있어서 국립공원도 이런 일자리 계획을 제출한 것 같은데 숲 생태 개선 사업 관련한 추경안은 좀 삭감하고 대신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19개 국립공원을 1200명 정도가 관리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일이 많이 고되다고 들었습니다. 우수한 인력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번 추경안을 좀 삭감하고 대신에 본 위원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 인력 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신다면 생태계 복원 사업도 완비를 하

도록 하고, 이 추경 예산으로, 또 따로 도움을 주신다면 인력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원진** 홍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서 박대해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 위원** 박대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희덕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환경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13개 사업의 추경예산 편성으로 총 1만 747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 이 일들이 모두 단기 사업성의 일용직 노무자들의 수처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견해입니다.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일자리 개수를 부풀리기 위해서 취업유발계수를 잘못 적용했다는 검토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보시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할 수 있는 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인데요. 현재 취업유발계수를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썼습니다.

더 정밀하게 검토하고, 지적되고 또 제시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대해 위원** 본 위원은 이러한 의견들에 일부 공감은 합니다만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나 실직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러한 일용직의 녹마저도 매우 절박하다고 봅니다.

단기적 일자리 창출도 현재를 견디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가 있고 또한 많은 지방 중소 건설사들에게 이번 추경 편성은 숨통을 틔워 줄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박대해 위원** 다음, 상수도 관망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전국 수돗물의 평균 누수율이 얼마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저희가 포착한 걸로는 11.8%인데 지역 간에 편차가 좀 심합니다.

○**박대해 위원** 전국 165개 시·군 중에서 가장 누수율이 높은 곳은 의성군으로 누수율이 50%나 되고, 누수율이 40% 이상인 지역도 열일곱 곳이나 됩니다. 수돗물 누수율은 아이러니하게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대도시 지역보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곳이 훨씬 높습니다.

누수율이 수돗물 단가와도 관련이 있어서 생활여건이 좋고 소득수준이 높은 대도시 사람들보다 자립도가 빈약한 농어촌에 사는 분들이 더 비싼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형평성과 상식에도 많이 어긋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강원도 태백군 가뭄지역 상수도 관망 개선 사업비로 100억 원을 책정했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박대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100억 원이나 되는 관망 개선 사업 추경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장관님, 2008년도 관망 개선 사업 예산의 실 집행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지금 61%라고 나와 있는데요. 낮다고 생각합니다.

○**박대해 위원** 이렇게 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러니까 관망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는 처리기간이 라든지 또는 관련 제도 미비 그리고 지방 부담에 따른 조치 지연 등 매우 복합적인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박대해 위원** 상수도 관망 개선 사업 등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선 사업이 현재와 같이 용자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면 현재의 낮은 실 집행률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용자 사업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중소도시에는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인 그런 사업인 것입니다.

더불어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의 실 집행률은 91.1%나 됩니다. 실 집행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관 정비는 국가 용자 사업이고 오수를 버리는 하수관거 정비는 국가 보조 사업이다 이렇게 생

각하는데 사실이지요? 맞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렇습니다.

○**박대해 위원** 이것은 사안의 중요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실제 예산 지원 실적 면에서 보더라도 국가 용자 방식인 상수도 관망 개선 사업은 1997년부터 2008년까지 5161억 원이 지원된 반면에 국가 보조 방식인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92년부터 2008년까지 그 8배인 4조 5196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처럼 두 사업의 예산 지원 실적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 지원 방식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우리가 먹는 상수도는 실생활과 직결되는 기본권의 문제이며 복지의 문제입니다.

상수도 관망 개선 사업을 용자에서 보조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장관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이만의** 저희도 어려운 지자체의 특성을 감안해서 보조 방식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시작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박대해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을 얻어서 좀 더 본격적으로 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해 위원** 이것은 꼭 바뀌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다만 한 가지 좀 더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수원을 이용해서 지자체가 스스로 일종의 혜택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그동안 보조를 안 해 준 반면에 하수도 사업은 수질이 악화되면 국가가 관리해야 될 문제를 키워 버리는 셈이 되기 때문에 국가 목적 차원에서 보조 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마는……

○**박대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회의 때마다 늘 짚었습니다만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재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부산 하이얼리어(Hialeah) 기지를 비롯해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조사 재개에 대해서 환경

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당부드렸습니다.

다행히 지난 3월 19일 한미 양국 간에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재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하이얼리어 기지가 있는 부산의 시민뿐만 아니라 반환 미군기지 및 주변 개발로 혜택을 보는 주민을 비롯해 많은 국민이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만의 장관님을 비롯하여 김종천 국장님, 백운석 과장, 맹학균 사무관 또 전임 강석우 서기관 등 이번 협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원진 간사, 추미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관님께서 이번 협상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받았겠습니다만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가 공동환경평가절차서를 합의 채택하면서 위해성 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절차서에 명확히 했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지금 미군이 주둔한 일본, 독일이나 필리핀 등과 같은 나라도 이렇게 위해성 평가 방식을 절차서에 명기한 나라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없습니다.

○**박대해 위원** 없지요?

추후 위해성 결과가 나오면 오염 치유 수준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텐데요. 사실 미군기지를 돌려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염된 토양의 치유라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오염 치유 수준에 대해서 우리들이 목표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장관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일단 오염 치유 수준에 대해서는 양측 간에 합의된 KISE, 즉 위해성 평가 결과 지적된 치유 수준에 대해서는 미 측이 부담을 해서 치유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부분이 의미가 있고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대해 위원** 하이얼리어 기지에 대한 공동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쯤 되고 또 이 공동 현장 방문에 참여하는 기관은 어디인지, 미국 측도 참여를 합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박대해 위원** 합니까?

또 현장 방문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5

월에 실제 이 오염조사가 재개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지금 5월에 현장을 방문하는 걸로 저희들이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바로 협의하고 또 착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박대해 위원** ‘하이얼리어’는 인디언 말로 ‘아름다운 초원’이라는 뜻입니다. 부산 시민들의 품에 아름다운 초원을 돌려줄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알겠습니다.

○**박대해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박대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이두아 위원님 차례가 되겠습니다.

○**이두아 위원** 장관님, 긴 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질의를 저도 좀 드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2009년도 환경부 추가경정예산안의 대부분이 상하수도 사업과 관련된 것들이고, 총 11개 사업 중에서 6개 또 증액된 추경예산 규모 중에서 68% 정도 규모가 이 상하수도 사업과 관련된 것이니까 이 부분에 위원들의 질의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근본적인 문제를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환경부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와 가뭄 극복을 위해 이 같은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상하수도 사업은 매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대비 효과가 낮아서 사업 편성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박대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장관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상수도 부분은 지자체가 수익자 부담에 따라서 아무래도 국고보조가 아니라 지자체에 용자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하수도 사업은 수질 개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신경을 쓰신다고 하셨지만 지금 전국 상수도 보급률 평균은 92.1%인데 반해서 농어촌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아직까지도 절반이 안

되고 45.2%라고 합니다.

중소도시 및 농어촌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고 반복적인 물 부족 사태로 이렇게 고통받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행과 같은 구조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통해서 지자체 상수도 사업을 확대했을 때 지방 건설업체들만 이익을 볼 뿐이고 지자체는 사업비 보조 이외에도 향후 지속적인 재정 적자의 누적요인을 떠안아야 되고 지자체의 주민들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비싼 수도요금의 부담을 안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환경부 입장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이만의** 우선, 상수도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매년 일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링이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빨리 상하수도 분야의 사업 추진을 도모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상수도와 관련해서는 행정구역별로 대개 자기들 고유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 인구가 계속 줄어가고 시설은 노후화되어가고 세입은 줄어들고 하다가 보니까 손을 대지 못하고 점점 더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해법의 하나는 지금까지 융자금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부문에 대해서 일부라도 보조를 해주고 특히 재정 형편이 매우 열악한 군 단위에 대해서는 더 높은 비율의 보조금을 주도록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설의 설치 주체는 행정구역별로 분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써 경영 효율을 향상시키고 그동안 나던 결손 부분을 줄여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중에 전국 두 군대를 통합 시범지역으로 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가뭄이 심한 태백, 삼척 등 강원지역에도 이와 같은 통합 운영 방식을 도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두아 위원** 그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지자체의 재정 적자를 부추기는 상수도의 구조적인 문제 개선책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추경 계획을 보면 환경부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따로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

고 연례적으로 그냥 수행해 왔던 임시방편적인 그런 사업들만 포함된 게 아닌가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이만의** 존경하는 이두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상하수도 분야는 전국적으로 수요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만 보면 연례적이고 전례 답습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2009년도에는 2008년 7월 하반기부터 시작된 가뭄의 피해가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지만 특히 피해가 심했던 태백, 삼척 등 4개 시·군 지역의 문제의 심각성을 온 국민에게 느끼도록 해 주었다고 보고 여기에서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관망 개량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관망 진단을 해 가지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 투자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우선 급한 관망 진단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두아 위원** 환경부에서는 지금 지방 및 광역 상수도의 급수체계 통합 조정과 최적의 관리 범위 파악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급수체계 조정 방안 구축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그다음에 지방 상수도 경영개선 지원 사업을 2009년도 신규 사업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상수도 공급 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가장 시급한 대책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추경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해당 사업 추진에 예산상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우선, 급수체계 통합 조정에 관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견해를 저희들이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지금 의뢰해 놓았는데 금년 12월에 그 결과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 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좀더 적극적인 사업 반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두아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을 해 주셨지만 언제쯤이면 이 사업 결과가 실제급수체계에 반영되어서 지방상수도 관리 범위가 조정될 수 있는지 또 현실화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저희가 도와드릴 게 있을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이만의** 우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두 군데에 통합 시범 사업을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을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9개 권역으로 상수관망 및 상수도 급수체계 경영 효율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 가지고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드리면서 예산도 계상해 줄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이두아 위원** 그러면 아까부터 계속 나왔던 말씀인데요. 지금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도…… 관망 진단 예산만 들어가 있는데 교체 사업 역시 상수도 사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업일 것 같은데 이 관련 예산은 추경안에 거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까 말씀을 올렸습시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12.8%의 누수율을 보이고 있는 노후 관망에 대해서 그동안 중앙정부가 보조해 준 일은 없고 융자금만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재정 형편이 나쁘니까 그 사업은 아예 시작을 안 하고 점점 상태를 악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우선 노후 관망 진단을 해 보면 구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접근 방법과 지방 실정에서 국가가 얼마를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요구 기준이 선명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하기를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70% 보조금을 지금까지 주어진 방식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가 요구를 해 올 경우 보조금액이 너무 크다 해서 구체적인 지원 방식에 관한 논의를 조금 세분화해서 다시 하자 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실무 차원의 협의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태백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관망 진단 사업을 해 보면 그 실태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기획재정부하고 협의 결과를 좀 더 구체화시키게 되면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상수도 분야에 대한 국가 보조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두아 위원** 그러면 관망 진단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왜냐하면 전문가 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금년 추경 사업을 통해서 관망 진단을 하게 되면 그 바탕으로 당장 내년도 2010년 상수도 분야 예산에서부터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지 않고 요구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다소 어렵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가뭄 대책으로 관정 개발 사업비 등 국가재정에서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고려해서 위원님께서 넓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두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수도 사업이나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순서는 김재운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김재운입니다.

추경 질의에 앞서서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 관련하여 장관님께 좀 묻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평균 협의 기간이 45일 정도 됩니다. 2008년도 환경영향평가 평균협의 기간이 4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인운하 주운수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20일 만에 처리를 했어요. 이렇게 급박하게 처리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앞으로 환경평가에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끌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2008년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일종의 규제 선진화 차원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김재운 위원 아니, 장관님, 경인운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테 이게 규제 완화 차원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성실하게 평가를 하더라도 빨리 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앞으로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2조 2000억이 넘는 엄청난 사업인데 이게 지금 20일 만에……

그것 제대로 환경영향을 평가했다는 근거가 있나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총 연장을 보면 또 사업비

를 보면 굉장한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래 굴포천 확장 정비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해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만 하고 운하로 새로 개설되는 3.8km 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자고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재운 위원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당연히 국토해양부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환경평가를 해 주도록 요구해 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3월 25일 날 착공하겠다고 국토해양부가 발표를 했고 바로 그 전날인 3월 24일 날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해 준 것은 국토해양부 요청에 따른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들한테 국토해양부가 평가보완서를 제출하면서 요구해 온 것이 3월 18일로 되어 있구먼요. 그리고 그동안에 3차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과장이 실무적으로 보고를 하고, 23일 날 국장이 보고를 해 주어서 조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3월 18일 날 요청이 와서 일주일 만에 이렇게 처리한다는 게, 그렇게 급박하게 처리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결국은 3월 25일 날 착공하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맞춰 가지고 졸속적으로 협의해 준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것 만약에 저희가 평가를 그때 마무리할 수 없었다면 아무리 국토해양부가 요구를 해도 그렇게 못 해 주었을 겁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청 온 지 일주일 만에 무려 2조 2000억이 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환경부장관 이만의 우리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좀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지태 예,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초에 연구원이 1월 22 날 초안 협의

가 와서 실무적으로는 계속 협의를 했었고요. 본안은 3월 4일 날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검토협의회 회의를, 전문가 회의를 하면서 국토부에서 그런 구두 협조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 내용적으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협의하면서 주운수로와 항만시설에 별도, 환경 평가가 아닌 통합사업의 누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지요, 환경부가?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지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앞으로 누적 평가 하실 거지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지태** 예, 해야 됩니다.

○**김재운 위원** 항만시설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반드시 누적 평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지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인천터미널 건설을 위한 매립지 부지를 양도 받아야 되는데, 항만시설인 경우는, 수도권해안매립지조정위원회가 열린 적도 없고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지태** 이제 아마 조만간 실무조정회의를 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한 것은 주운수로입니다. 기존에 굴포천 방수로 공사했던 데에서 5km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영향이 비교적 적었고요. 앞으로 터미널 부지하고 항만이 별도로 또 들어오면 누적 평가를 하게 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것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지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지태** 그 문제는 국토해양부 소관이라 아직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김재운 위원** 그리고 국토해양부가 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는 당초 계획인 매립지 284만㎡보다 훨씬 늘어난 330만㎡를 편입사항으로 수정 요구했지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지태** 그것은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수도권은 우리 해안매립지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 협의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급박하게 협의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부지도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환경부가 철저하게 사전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지태**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재운 위원** 들어가시고요.

장관님!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김재운 위원** 지금 석면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데요. 유아용 베이비파우더에서 시작된 사태가 화장품, 의약품, 공산품으로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렇습니다. 아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 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석면이라는 게 잠복 기간이 매우 긴, 뒤에 일종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면이 있고 또 하나는 널리 가공되어서 쓰였지만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것이 세계적인 추세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석면 관련 질환을 앓는 분들이 나타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제기가 되기 시작하니깐 정부 차원에서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보면 약간 늦은 대응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심각한 문제가 없는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보완을 할 겨를이 없었다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지금 아기들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우리 국민 모두가 석면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결국은 환경부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겁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래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판단 하에서 지금 석면포럼을 구성해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지금까지 석면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건강검진 그리고 여러 가지 관리와 함께 진정 아무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비산 중인 석면을 흡입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석면을 쓰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와 철거 또는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관리하는 데 주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식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품이나 식품 등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면서 좀 더 관리 범위를 넓혀야 되겠다는 인식을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부처 간 통합 회의를 해서 이제 총량적으로, 총괄적으로 환경부가 주관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정부 차원의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국민이 석면 때문에 피해를 더 보거나 또는 피해에 대해서 무감각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난해 12월에 공공건물에 대한 석면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는데 발표하지 않는 이유가 뭐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닙니다, 최종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중간에 그것 얘기를 들었는지 또는 낚시를 쳤는지 하는 일부 언론 매체해서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아마 무슨 얘기가 중간에 나간 모양인데 그것이 보도가 되어 가지고 사안이 좀 확대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석면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을 더 추가하고 그리고 전문 인력을 좀 확보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향후에 석면의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우리 김재운 위원님이 강조하신 바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아무리 저희들이 노력을 해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방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고드리고 또 협조도 구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번에 환경부 추경 예산을 보면 2007년도부터 시행한 국가재정법에 준하는 추경 편성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장관님?

○환경부장관 이만의 근본적으로는 당연히 기존 법제에 바탕을 두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워낙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국회에서 좀 더 신축성 있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국가재정법에 준거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런 편성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국가재정법에 준거를 하더라도 그 현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좀더 넓은 의미의 국민적 이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가재정법에서도 경기 침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우리 국회에서 선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리고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에 보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편성을 보면 아예 본예산, 그러니까 2009년도 본예산에 없는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된 경우가 있어요.

국립공원 숲 생태 개선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또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서 여러 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생태 숲 관련해서도 한 군데가 있고, 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에서도 몇 군데가 있고, 이렇게 아예 본예산에 없는 것을 추경 편성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본예산을 편성할 때 상정하지 못했던 경제 위기가 코앞의 현실로 닥쳐 버렸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환경부장관 이만의 사업 면에서도 추가를 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지금 정수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것에 전혀 합당하지 않지요? 지금 새로 편성하는 예산들이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전쟁이라든가 자연재해에 대비한 경우도 아니고, 경기 침체와 대량 실업에 대한 대응도 아니고 그리고 또 법령에 따라서 국가가 지급해야 될 지출이 발생한 경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 편성된 예산 중에서 정말 긴급하게 어려운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것은 그나마 납득이 되지만 이렇게 지금 전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도 않은 예산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2009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지 지금 3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여기에다가 또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도 너무 무리한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이번 추경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뉴딜 차원에서 공공부문 지출을 통해 가지고 저희 환경부 소관으로서는 환경에도 기여하고 동시에 비록 저렴한 수준이나마 임금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데 역점을 두다 보니까 예정에 없던 사업도 추가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본예산에서 반영이 덜 되었지만 그래도 고용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증액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을 사랑하시는 김재운 위원님께서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번 추경이 국채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하는 추경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국민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면서 정말 꼭 필요한 데 예산이 편성, 집행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추경 편성이 이루어지고 집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위원님 말씀을 두 번 세 번 유념하면서 그렇게 사업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진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사실 추경을 다루는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세수 감소가 11조 2000억이고 추경이 17조 7000억, 28조 9000억인데 세수 감소 부분이 야당에서 얘기한, 저는 여당입니다. 조금 잘못된 부분, 잘못된 정책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국채, 지방채 빚을 내서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꼭 필요한 데 또 현실적,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전제로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유념하면서 일도 하고 답변도 올리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이 얼마

나 지금 잡혀 있습니까? 950억 잡혀 있지요, 그렇지요? 950억이 잡혀 있는데……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950억……

○**조원진 위원** 장관님,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니깐 기억 좀 하시지요. 950억 잡혀 있는데,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해 말씀드렸다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려면 우선 지류, 샅강을 먼저 해야 된다. 윗물이 더러운데 어떻게 아랫물이 깨끗할 수 있느냐는 논리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총리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일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샅강이나 지방하천을 먼저 손을 좀 대야 된다. 그리고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비판한 부분이나 우리 야당에서 얘기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면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천 정비하지 않고, 하천 복원하지 않고 분류부터 손을 대면 분류는 거의 깨끗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장관님, 맞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원진 위원** 또 한 가지는 정부 부처 간 이기주의가 극에 달했다는 느낌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예결위원회에서도 결의를 했고 감사원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에서도 좀 조정을 해라……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국민들은 이게 다 환경부가 하는 줄 알지 국토해양부가 한다고 믿겠습니까?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가 하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국토해양부가 하고, 지난해에 5000억이 잡혀 있는, 4대강 사업 전에 국토해양부보고 모든 생태하천 관련된 것은 환경부로 넘겨라, 이래 가지고 예결위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무실에서 조정을 못 하면 이 정부가 도대체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보는 정부입니까? 국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라고 국무총리실로 내려 보냈으면 조정하는 모습은 보이지 못할망정 이게 뭐니까, 지금?

13개 시·군에다가 작년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90억 넣고 올해 추경에다가 국토해양부가 무슨, 생태하천을

국토해양부가 될 겁니까? 1000억을 또 넣어 놓았어요. 1290억을 넣어 놓았는데, 우리 지역구는 아니지만 대구 심천에도 3억 넣어 놓았는데 그 돈 당장 가져가라고 그러세요.

정부가 이런 식으로 부처 이기주의, 모든 것을 자기가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나라가, 대통령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녹색 성장, 저탄소 녹색 성장, 뉴딜, 신 뉴딜, 녹색 혁명, 매일 부르짖는데 국토해양부하고 환경부는 정 반대로 가고 있으니 여기 있는 공무원들 다 사표를 내든지, 국토해양부 문을 닫든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간단하게 장관님 입장 한 마디만 해 주세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저탄소 녹색 성장을 장기적인 국가 비전으로 현 정부에서 선언을 하니 모든 부처가 녹색, 녹색 하면서 사업에 에코 또는 녹색을 추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있어서……

○**조원진 위원** 장관님, 말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조원진 위원** 바꾸어야 되지요? 환경부가 일어나서 국토해양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에 얘기해서 바꾸십시오.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원진 위원** 2290억 받아 가지고 환경부에서 하세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거야말로 이미 추경안이 여기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우리 조원진 위원님을 포함한 국회에서 조정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협의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이것 국회의원들이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조원진 위원** 이것 정말 잘못된 거예요.

또 두 번째 부처 이기주의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기후특위 했는데 말이지요.

아니, 지경부가 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또 그렇게 나섭니까? 지경부는 이렇지 않습니까? 산업체하고 어떤 산업을 잘 육성시켜서 발전시킬 것인가……

지경부하고 환경부의 입장은 조금은 반대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조원진 위원** 어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양에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어떻게 지경부가 산업을 관리하면서 자기들이 배출가스 그 다음에 CO₂ 배출 거래 이 부분을…… 지경부가 하겠다고 해서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극단적인 부처 이기주의입니다, 극단적인 부처 이기주의.

만약에 그런 식으로 법안이 형성되어 의결이 되면 환경부는 의미가 없는 부서예요. 잘 유념해서 가지고 정부 측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또 이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 제가 한 얘기를 속기록을 가져가서 말씀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또 다른 얘기 하나 할게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임홍우** 예.

○**조원진 위원** 반달곰 모자가 죽었는데 왜 죽었습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임홍우** 반달사슴곰이 북한에서…… 암놈 2개체가 5년 만에 각각 한 마리씩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폐사했는데 그 서식지가 완전히 반달곰이 생존할 수 있는 적지가 못 되는 게 아닌가……

○**조원진 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리산에 있는 반달곰이…… 아니, 온 국민들이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반달곰이 새끼 낳았다 해 가지고 얼마나 어린애들이 좋아했습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임홍우** 예, 그렇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것 언젠가는 한번 보러 갈 거라고 말이지요.

언제 영상에 나왔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지만 흥분했다 말입니다, 흥분.

그런데 그 두 마리가 다 죽었어.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임홍우** 다 죽지는 않았습니다.

○**조원진 위원** 아니, 새끼하고 엄마가 죽었다 말이에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임홍우** 예, 한 개체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새 장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좋은 장비들
 놔 놓고 말이지 반달곰이 자생해서 살 거다……
 그것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관리공단에서 그것 원인 규명을 하십시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 예.

○**조원진** 위원 그리고 죽은 두 마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제 개인 생각에는 정말 박제
 해서 자연 관리를 잘못된, 생태 관리를 잘못
 한 비판을 받으셔야 됩니다.

들어가세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 예, 알겠습니
 다.

○**조원진** 위원 그리고 노후관망 문제 얘기하셨
 는데 노후관망 교체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
 다.

우리가 수돗물을 만드는 데 엄청난 돈이 들어
 가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40% 이상이 누수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지요.

그런데 노후 관망 아까 박대해 위원님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게, 누수현상이 많은 지역이 바로
 놓여촌입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렇습니다.

○**조원진** 위원 돈을 주면 뭐 합니까, 예산이 없
 어서 못하는데?

태백에서 말이지요. 저희들이, 이번에 한나라당
 환노위원들이 낙동강 1300리를 다 갔다 왔습니
 다. 태백에서부터 을숙도까지 11개 시·군을 우
 리가 붙여서 갔다 왔는데, 왜? 저희들이 4대강
 살리기라는 얘기를 하면서, 낙동강 얘기를 하면
 서 현장을 다 가보지 않고 얘기한다는 게 너무나
 부끄러워서 갔다 왔는데, 태백은요. 우리나라에
 물을 처음으로 만들어 주는 지역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오십천이 되고 밑으로 가면
 낙동강이고 왼쪽으로 가면 한강이거든요. 그 자
 존심 강한 물을 만드는, 우리나라 물의 최초 시
 발지가 물이 없어 가지고 비상사태가 걸리니까
 태백 시민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요, 정부에서 가뭄재해지역으로
 해서 100% 만들어 줘야지요. 관망도 하고 대책
 을 세워줘야지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정부에
 다가 대도시, 특히 서울시 예산 많습시다.

이런 부분 떠나서 말이지요. 지방에 예산 없는
 놓여촌에는 관망을 정부에서 책임을 져줘야지요.
 그런 부분을 좀 건의하십시오.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조원진** 위원 그게 바로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
 다. 그게 바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고 농민을 위
 한 정책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조원진** 위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위원님 견해에 전적으
 로 공감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석면문제는 절대로 감춰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
 다.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고 석면의 위험성을
 알아야 됩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렇습니다.

○**조원진** 의원 그런데 제가 보는 환경부의 석면
 에 대한 대책은 뭔가 자꾸 감추려는 생각이예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조원진**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면 추경
 예산에 올려야지요. 예비비로 올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석면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
 니다’, 국민들한테 안심도 줘야 되고 ‘이런 이런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석면문제가 시급
 하게 자꾸 다가오고 있는데…… 그게 급한 예산
 아닙니까?

그런 예산들 좀 배정을 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석면에 대해서 우리 환경부가 책임
 지고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
 오’ 이렇게 만들어야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
 다마는……

○**조원진** 위원 그것 예비비로 할 필요 뭐 있습
 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기획재정부 쪽에서 예비비
 가 있으니까 또……

○**조원진** 위원 기재부가 환경문제 책임지는 것
 아닙니다. 기재부는 돈만 생각하지, 재정만 생각
 하고 있지, 환경문제는 환경부에서 해야지요. 기
 재부에서 뭐라 그러더라도 이런 당연적인 논리를
 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석면에 대해서 기재부
 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일자리 창출 중심의 추경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예비비 성격이 더 맞다 이렇게 ……

○**조원진** 위원 장관님, 일자리 창출 자꾸 얘기
 하시는데 일자리 창출에 묶여 가지고 모든 사업
 에…… 이게 뭐니까? 일자리 창출효과가 곱하기

1.6입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1.63입니다.

○**조원진 위원** 1.63입니다. 이런 예산…… 이견 누가 만든 겁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SOC 분야만 그렇습니다.

○**조원진 위원** SOC에 따라서 사람을 많이 쓰는 사업이 있고 사람을 적게 쓰는 사업이 있지 이게 어떻게 모든 사업에다 곱하기 1.63 해 가지고 인원 전체 1만 7470명 일자리 창출, 이것은 국민학생이 하는 소리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동안에……

○**조원진 위원** 정부에서 이런 소리를 가지고 국회에다 냈다는 자체가 국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닙니다.

○**조원진 위원** 이것 다시 만드세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조원진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하는데 1.63이고 저 위에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하는 데도 1.63이에요. 사람 쓰는 사업 자체에 토목을 많이 하는 사업이 있고, 기계를 많이 쓰는 사업이 있고,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1.63을 곱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것부터 바꾸세요. 아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저희도 나름대로 저희 부문에 대해서라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가지 경제 발전 과정에서 쌓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나온 계수이기 때문에 또 함부로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원진 위원** 제일 급한 것은요. 안동댐 위에, 우리 이번에 1300리 갔는데 폐기물 하치장이 만 들어났다가 다 부서졌어요. 안동댐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것요 폐수가 계속, 오염물질이 계속 안동댐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 왜…… 물환경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제가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워낙 긴급한 문제라서. 그래서 우선 올해는 조치를 우수가 침투하지 않고 밑에 침출수가 흐르지 않도록 일단 긴급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근본적인

대책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는데……

○**조원진 위원** 보세요, 차관님. 긴급한 사항이 먹는 물에다가 지금, 오염물질이 그냥……

○**환경부차관 이병욱** 아니, 지금 현재 나가지 않습니다.

○**조원진 위원** 오염 쓰레기장이 아니고 폐기물 이에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아니, 글썄……

○**조원진 위원** 폐기물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긴급한 문제는, 그런 게 긴급한 겁니다. 긴급추경에 그것 올리세요. 올려 가지고, 우리라도 올려야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아니, 그런데……

○**조원진 위원** 거기에다가……

○**환경부차관 이병욱** 위원님……

○**조원진 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거기에다가 말이지요,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여름에 홍수지면 다 내려옵니다. 다 떠내려……

지난번 낙동강에 고기 다 죽은 것 있지요? 부하게 떴지 않습니까? 그 현상이 떠내려온다는 얘가지요. 그러면 환경부가, 누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물환경국장이 책임지시나, 현장 갔다 왔으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래서 그 문제를 위원님, 그것은 돈의 문제도 있고 시간의 문제입니다. 지금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우기까지 마칠 수 있으면 지금 하는데 이번……

○**조원진 위원** 아니 우기를 맞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잡아놔야지 올해 중에 할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그것은 제가 별도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우선 전체 한 80억 들어가는데 미리 예산을 좀 잡으세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알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왜냐하면 올해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낙동강에 또 물고기 떼죽음 합니다.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알고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너무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가운데에서도 자주 반복 지적이 됐지만 이번 추경이 긴급 경제 비상시에 대한 긴급 추경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국토해양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벌이고 있으면서 SOC 사업 위주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 면에 있어서도 지극히 의심스럽고 정말 환경을 지키는 중심 부서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제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시급히 해야 될 사업과 아닌 사업이 체계적으로 설득력 있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중심이 돼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도 적절하게 지적됐다시피 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생태 복원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가 먼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입장을 가지고 환경에 대한 생태 복원 차원인지가 시간을 가지고 점검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장관님 5월이면 4대 강 살리기 세부적인 계획이 나온다는데 현재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 마스터플랜 수립 작업에 환경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그냥 참여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추경 반영 정도를 보면 환경부가 끌려가고 있다는 소회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 관련한 주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끌고가고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성을 띠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번 예산 심의에 있어서는 예산소위에서 추경 예산 각 부분의 문제점을 좀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각으로 봐서 정회 선포 다음 속개시간은 3시가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委員長 秋美愛**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환경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동부 추경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한 가지 의견을 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대체토론을 종결한 후 소위 회부를 하지 못한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 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동부장관님 나오셔서 노동부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82회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부 소관 2009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정부는 3% 내외의 경제성장을 전망하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월 현재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기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악화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실제 일선 현장에서도 고용안정사업, 실업급여, 생계비 대부 등 지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관련 사업의 재원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 2월 23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 경제 주체들의 실천사항을 담은 노사민정 합의를 이룬 바 있습니다.

정부는 합의 정신의 확산을 위해 노사의 양보 교섭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적극 지원키로 함에 따라 이를 위한 추가적인 재원 확보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당초 예산보다 2조 8484억 원 증액된 14조 6031억 원을 금년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방향 및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범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를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단위에서의 일자리 나누기, 위기극복 실천 운동, 노사협력 사업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 유지를 위한 휴업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근로자를 위한 지원 수당을 신설하고, 고용유지조치기업에 대해서도 새로이 실시하는 대부사업 등을 통해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취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장려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저학력·취업애로 청년층을 위해 기존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을 확대하면서 정규직 취업으로 연계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훈련 기회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미취업 건설 일용근로자를 위한 특화된 훈련 프로그램을 새롭게 실시하고, 실업자 및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훈련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본격 실시 중인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 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경제 위기로 인해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지역에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업급여 및 생계비 대부 재원을 대폭 확충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 증가 추세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직급여 및 연장급여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실직가정·체불근로자·신규실업자 등에 대한 생계비 대부사업 지원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른 노동부 2009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399억 원을 증액한 1조 3768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3556억 원,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9억 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607억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51억 원,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는 3억 원입니다.

한편 노동부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고용보험기금 2조 1157억 원, 근로복지진흥기금 4928억 원을 증액한 13조 2263억 원이며, 기금별로는 고용보험기금 7조 7719억 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조 3728억 원, 임금채권보장기금 2257억 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2286억 원,

근로자복지진흥기금 6273억 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최선의 노력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노동부 소관 2009회계연도 추경편성안 개요를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기획조정실장 송영중** 기획조정실장 송영중입니다.

2009년도 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09년 추경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방향, 총괄,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우선 편성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상보다 경제·고용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 시에 경제성장률을 3% 내외, 취업자 증가 12만~13만 명을 전제하였으나 최근 경기 악화로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2%, 취업자 수는 20만 명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발표된 통계청의 고용 동향에 따르면 금년 3월 취업자가 19만 2000명이 감소하는 등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실업자도 95만 2000명, 실업률은 4.0%입니다.

주요 일자리 사업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이 지난 2월 23일 날 발표되었습니다라는 정부부문 소관 사항 이행을 위해서 관련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를 중점 지원하고 청년층에 대한 추가대책 시행,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훈련 확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지원사업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였습니다.

2쪽 총괄입니다.

09년도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11조 7547억 원 대비 2조 8484억 원이 증가한 14조 6031억 원입니다.

예산은 1조 3768억 원으로 2399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13조 2263억 원으로 2조 608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증액 중 고용보험기금은 2조 1157억 원,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은 492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쪽 일반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나누기 지원사업입니다.

노사민정 협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지역파트너십 협의체를 통해 추진하는 일자리 나누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 30억 원, 23개소에서 50억 원, 43개소로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노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위기극복을 위한 양보 교섭 확산, 일자리 나누기 등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 40억 원, 83개소 지원에서 50억 원, 105개소 지원으로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쪽 청년고용촉진사업입니다.

취업장려수당을 신규로 지급코자 합니다.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취약 청소년·저소득층 등에 대해서 1년간 월 3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신규로 11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600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미취업 청년을 채용할 경우에 임금의 50%를 지원하되 취약 청년층에 대해서는 70%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를 확대하겠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학력·장기 구직 청년층에게 진로지도에서 취업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83억 5000만 원, 1만 명 지원에서 176억 원, 1만 5000명으로 9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층에게 진로 탐색과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151억 원, 1만 8000명 지원에서 205억 원, 2만 5000명 지원으로 5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훈련 확대입니다.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새롭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미취업기간 동안 특화된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서 신규로 100억 원을 반영했으며 10만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교육, 도면 보기 등이며 하루에 1인당 1만 5000원의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실업자와 폐업 영세자영업자 증가에 따라 신규 실업자 등 직업훈련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당초 985억 원, 4만 4000명에서 1199억 원, 5만 2000명으로 2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대상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근로빈곤층에 대해서 통합적인 취업 지원과 취업성공수당 지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104억 원, 1만 명 지원에서 124억 원, 1만 5000명으로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경험을 통하여 취업 의욕을 진작시키고 기초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44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 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 확충입니다.

고용상황 악화로 인해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 지원금 수요가 급증하고 신규사업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서 고용서비스 인턴을 추가 채용하기 위해서 18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460명에서 1160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종합상담센터를 확충하기 위해서 20억 원을 증액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인건비 등 24억 원은 고용보험기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에서 제공하는 체류나 취업지원서비스 비용 지원을 위해서 당초 예산 12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1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의 낙후된 실습동을 개축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교육훈련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당초 1310억 원에서 1780억 원으로 47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일자리 효과 평가를 위해서 신규로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 고용보험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나누기 지원사업입니다.

휴업 근로자 지원수당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평균임금의 40%와 실제 지급받은 휴업수당의 차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신규로 99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만 100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을 새로이 시작하겠습니다.

고용유지조치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저리로 대부하는 사업입니다.

신규로 6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대제 전환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교대제로 전환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182억 원을 반영해서 1만 7000명에게 혜택을 부여코자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최근 고용유지계획서 신고 추이를 감안해서 충분한 규모가 확보되도록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당초 583억 원에서 3653억 원으로 307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직업훈련 확대입니다.

전직실업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전직실업자 직업훈련 규모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30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근로자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등 재직자 직업훈련도 확대하겠습니다.

당초 580억 원에서 708억 원으로 12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용유지 컨소시엄 훈련을 확대하겠습니다.

고용조정 예상 산업분야의 중소기업이 유휴인력을 대상으로 대기업, 사업주 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당초 169억 원에서 379억 원으로 2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으로 3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하는 기업에게 인건비의 2분의 1, 대규모 기업은 3분의 1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1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기구직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 수준을 20% 인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9쪽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 증가추세에 따른 필요 재원 확보를 위해서 당초의 실업급여 예산 3조 3265억 원에서 4조 8648억 원으로 1조 538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에 구직급여 재원은 2조 9272억 원에서 3조 7927억 원으로 8655억 원이 증액되었고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해서 672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과 전직실업자에 대한 훈련 확대에 따라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예산을 356억 원에서 414억 원으로 5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10쪽 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 확충입니다.

전직지원서비스 수요가 높은 지역에 노사공동 재취업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소요 예산 4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종합상담센터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기금에서 추가적으로 2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 근로자복지진흥기금입니다.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당초 27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27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은 당초의 300억 원에서 2300억 원으로 20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없는 신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은 당초 240억 원에서 308억 원으로 6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쪽 신용보증대위변제사업입니다.

신용보증대위변제금은 대부 재원 확대에 따른 것으로 당초의 87억 원에서 208억 원으로 12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부 재원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공자기금에서 차입함에 따라서 이자상환분을 23억 원에서 167억 원으로 14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년 예산편성 시보다 현재의 환율이 상승했습

니다. 그에 따라서 해외차입금 차입원금과 이자상환 증가분 5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3쪽 추경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노동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창희** 지금부터 노동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개요와 검토의견 중에 총괄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검토 요소가 있는 기존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으로 가시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의 취업장려수당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구직자의 기대에 못 미치는 임금 제로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취업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1년 동안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11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제일 밑의 줄 보시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고 구직자를 조기에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도록 유도하여 인적 자본 축적 및 경력 개발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동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 내용, 절차, 기대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사업입니다.

중간 하단입니다.

여전히 건설업 종사자들의 취업이 어려운 상태로 보이며 비정규직 건설근로자의 취업은 더욱 어려워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번 추경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계상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안전교육, 도면보기교육 및 기능훈련을 실시하고 교육·훈련 참여시 참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비, 식대와 교통비 1만 5000원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며, 산업안전교육은 1일, 도면보기교육은 5일, 기능훈련은 20일의 교육기간

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사업 대상자들인 비정규직 건설근로자들을 교육현장으로 이끌어낼 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교육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교통비 및 식대로 지급되는 1만 5000원의 수당이 훈련 참석 유인으로서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13쪽 일자리창출사업 평가시스템 운영입니다.

제일 하단에, 정부는 경기침체의 가속화로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거시경제정책 및 산업정책 등이 보다 고용친화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단 보시겠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사업의 내용상 위탁사업비나 보조사업비로 편성하여야 할 사업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은 출연금 지원에는 법적 근거가 분명한 경우에만 출연금으로 계상·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출연금으로 예산을 계상할 경우에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위탁사업비나 보조금으로 비목을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휴업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고용 유지를 위하여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의 단축·휴업을 실시하고, 평균임금의 40%와 실제 지급받는 휴업수당의 차액을 휴업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사업입니다.

약 6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992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6쪽 중간입니다.

휴업수당의 사업주 부담분을 정부가 많은 부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업근로자 지원수당을 신설할 경우에는 법정 휴업수당, 평균임금 70%를 지급할 수 있는 기업도 무급휴업 신청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 발생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17쪽, 중소기업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입니다.

요약해서 간단하게 박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적인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에 고용유지

자금을 대부하는 것은 최근의 경기침체 상황에 비추어 매우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결손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어 대부 과정에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사전에 결손을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18쪽 하단의 고용유지(교대제전환) 지원금사업입니다.

19쪽입니다.

동 사업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노사 합의에 의하여 교대제전환을 실시할 경우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삭감된 임금의 3분의 1을 사업주에게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기존의 고용유지 조치 이외의 교대제전환 등 다양한 종류의 고용유지 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1만 7000명의 교대제전환 지원을 위해 18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고용유지 지원책의 하나인 휴업에 비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제도적 활용 가능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20쪽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따라서 교대제전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금 지원 비율을 높이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1쪽입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사업입니다.

요약해서 박스를 보시겠습니다.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이 있을 경우 정부는 사업주에게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지원금에 대한 수요 증가 시 예산이 다소 부족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일반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노사민정 파트너십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와 고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9년 당초 예산으로 30억 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이번 추경예산으로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그러나 전체 사업 예산의 24%에 해당하는 12억 원의 포상금 예산은 사업이 정착되는 과정에

서 점진적으로 지자체 지원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예산사업으로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없는 가운데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사관계 발전 및 노사파트너십 제고 프로그램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40억 원을 이번 추경으로 10억 원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25쪽 제일 하단 문단입니다.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부담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원 사업장에 대한 매칭비율과 지원한도액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지원 대상 사업장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6쪽,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최근 경기 불황에 따른 청년층 취업난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청년인턴 채용 기회를 확대하여 취업을 촉진하고 경력 형성 및 근로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재도입된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9년 확정예산에 비해 40.4% 증가한 2235억 원으로 644억 원이 순증된 규모입니다.

청년인턴사업 규모가 기존 2만 5000명에서 3만 7000명으로 1만 2000명이 확대되어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사업 효과가 미흡하여 2005년에 폐지되었다가 2009년에 새로 도입된 제도로 사업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8쪽,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스에 보시면 경기침체 시 취업애로 청년층은 고용상 불이익 및 취업 기회의 상실 가능성이 크고 2008년 동 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취업률이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지원 대상의 확대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2단계 프로그램에 대한 별도의 예산 지원이 없어 효과적인 사업 집행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0쪽의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동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을 제공하여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5억 원이며 이에 따라 매월 30만~40만 원의 수당을 받는 참여 대상이 1만 8000명에서 2만 50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하단에 보시면 이번 추경예산안에 따른 추가지원 인원 7000명 중 5000명을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각종 민원 처리로 업무가 과중한 상황임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의 효율적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에 앞서 양질의 체험 프로그램 확보 등 사업의 내실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은 정부의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대상자가 일정 부분 겹치기 때문에 기존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외에 별도의 예산 지원이 없을 경우 참여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4쪽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이번 추경에서 증액된 445억 5000만 원은 사회적일자리사업에 경과적일자리사업이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사실상 신규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과적일자리사업은 지역사회에 봉사적 성격을 갖는 일자리로서 구직자에게 일정 기간 일자리 경험과 직장 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 근로자가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기 위한 징검다리 일자리로서 계속적·안정적 일자리와는 구별됩니다.

이 사업의 참여예정자는 구직 등록 후 1개월이 경과한 취업 취약계층이고, 참여자 1만 명에 대해서는 5개월간 월 73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마지막 하단 문단 보시면 그러나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경합 관계에 있으며, 희망근로 프로젝

트는 월 83만 원을 기준으로 6개월간 실시할 계획에 있어 경과적일자리사업보다 근로자들에게 선호될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을 재검토하여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액과 사업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6쪽의 외국인력관리 지원사업과 38쪽의 한국폴리텍대학 운영 지원은 자료로 같음하겠습니다.

41쪽, 고용보험기금 사업으로서 첫 번째,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 및 수당의 3분의 2 내지 4분의 3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 편성 전에 808억 원을 먼저 반영하였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3069억 원을 추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42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추가 연인원 92만 8000명의 근로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바, 최근의 고용 상황과 고용유지지원금 집행의 증가 추세로 볼 때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매우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43쪽의 직업능력개발사업입니다.

44쪽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훈련은 210억 원을 증액하여 총 5만 4000명에 대하여 훈련비와 인건비 일부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 이 사업의 훈련기관으로 선정된 33개 훈련기관의 훈련 과정을 보면 대부분의 과정이 중소기업의 경영자 또는 최상위의 근로자에게 필요한 교육 과정으로 보입니다.

45쪽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훈련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 취지에 부합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원하는 훈련기관 및 훈련 과정을 개발하여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실업급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으로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46쪽의 구직급여 세부사업입니다.

두 번째 문단 보시면 글로벌 금융 위기로 국내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8년 말부터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이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자 수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구직급여 수혜자가 102만 명에서 132만 명으로 약 30만 명이 증가하게 되어 실업자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장급여입니다.

48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훈련 및 개별연장급여는 당초 17억 원에서 121억 원 증가된 138억 원이 계상되었고 특별연장급여는 이번에 신규로 6606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훈련 및 개별연장급여의 증액으로 현재 800명 수준의 수혜자가 약 8000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경기 침체 시 재취업에 곤란을 겪는 실업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로 생각합니다.

49쪽 마지막 문단입니다.

특별연장급여 지급 시 매월 약 6만 3000명이 특별연장급여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실업자 생활 안정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0쪽의 노사공동재취업센터 지원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3쪽,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사업입니다.

55쪽으로 넘어가서 개요를 말씀드리고 마치고 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원 검토의 필요입니다.

당초 동 기금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이었고 지원 대상이 신규실업자 중인 점, 기금의 주 수입원인 복권기금의 지원 축소 경향 등을 고려하여 2009년 사업 확대에 따라 증액 변경되는 신용보증대위변제금과 공자기금차입이자상환액에 대한 일반회계의 점진적 부담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신용보증대위변제금은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노동부에 대한 대체토론도 위원님 1인당 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순서에 따라서 홍희덕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덕 위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15개 사업, 고용보험기금으로 14개 사업에 대한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가재정법 89조에서 정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사업, 일자리 창출 평가시스템 운영, 한국폴리텍대학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추가경정의 필요성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실제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등과는 상관없는 사업입니다. 소위 끼워 넣기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 노사민정에 20억 원, 노사파트너십에 10억 원 증액한 금액은 지난 2009년 예산 요구했다가 삭감된 금액입니다.

국회의 예산 심의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인데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예를 든다면 지역 노사민정 협력사업이라든가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이것은 기존에 제출했던 그 사업을 그대로 그냥 확대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특히 2월 23일 우리 고용 위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민정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합의를 전국적으로, 지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지역 단위에서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가 되었고, 그러한 위기 극복 실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으로 저희들이……

○**홍희덕 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알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다음은 일자리, 인턴에 대한 것인데 명칭부터 좀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려운 한자나 복잡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법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턴사원, 인턴이라는 말도 국어사

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습사원으로 고쳐야 합니다. 실습사원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왜 쉬운 말을 놔두고 외국어를 씁니까?

고용지원센터 182억, 청년 직장 프로그램 54억,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92억, 중소기업 실습사원제(인턴제) 643억, 종합상담센터 44억, 사회적 일자리 445억 원 등에 1460억 원을 쏟아 부으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약 3만 4772명이 임시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더구나 이들은 모두 올 12월이면 끝나는 일입니다. 일시적이고 말 그대로 실습사원입니다.

1460억 원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우선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많은 실직,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것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고 할 때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줄어들 수가 있고 또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덕 위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증액 요구한 20억 원은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재정 지원에 14억 원, 노사 상생 우수 자치단체 포상에 6억 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자리 추경과 직접적으로 아무 연관도 없습니다.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노사민정 합의문 중 관련 내용’이라고 첨부하였으나 국가재정법상 추경의 필요성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30억 원 중 14억 6000만 원을 23개 자치단체에 지출하였으나 그 사업 내용도 일자리 창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대부분 지역 노사민정 운영, 노사파트너십 워크숍, 노사 화합 행사비 등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업비는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 사업도 아닙니다. 다른 사업처럼 견습사원 일자리라도 만들지 않습니다. 이번에 증액 요구한 10억 원은 2009년도 예산 심의 시 삭감된 것을 다시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가 삼심제도 아니고 이게 됩니

까? 국회의 예산 심의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조금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의 사업 외에 어떤 다시 확산하는 것이 아니고 노사민정 합의를 실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추경에서 증액되는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중 경과적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추경에서 증액되는 445억 5000만 원은 모두 경과적 일자리 2만 4000명인데 월 73만 원의 5개월 저임금 단기 일자리입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근로사업인 희망프로젝트와 사업 내용의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기간이 더 짧아서 효과가 좀 불확실하다. 따라서 사회적 일자리 예산에서 추경에 올라온 455억 원의 경과적 일자리 예산은 실효성이 없는 생색 내기용 예산으로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노동부 추경 사회적 일자리사업에서 경과적 일자리 명목으로 445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데 이 경과적 일자리사업과 기획재정부의 희망프로젝트 사업과의 차이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의견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데 왜 73만 원짜리 최저 임금에 5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지 좀 의문이 가고요. 그것도 기획재정부 희망근로프로젝트와 겹치는 일자리 사업이라 효과도 의심되는 사업입니다. 기획재정부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동부가 단기 저임금 일자리를 만든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동부가 지난 2007년에 사회적 일자리 부처 공모형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의 평가가 매우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직접 노동부가 2007년에 사회적 일자리 예산으로 시범사업을 했던 한양대의료원 보호자 없는 병동을 다녀왔습니다. 병원 관계자, 환자들과 가족들 모두 너무나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과 같이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월등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노동부에서도 보호자 없는 병원과 같은 우수모델 사업들의 경우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예산 편성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단기 저임금의 경과적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것보다 보호자 없는 병원 같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또 그것은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경과적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취약한 근로자들, 말하자면 취업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충분한 여러 가지를 갖추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그런 경과적 일자리를 통해서 취업의 경험을 갖고 자신감을 갖게 해서 사실은 사회적 일자리로 넘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로서 저희들이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대신 지난번 노동부가 시행했던 부처 공모형 사업의 경우 예산 규모도 적고 각 부처의 작은 사업들을 너무 백화점 식으로 나열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작은 사업들을 나열할 것이 아니고 보호자 없는 병원과 같은 좀 굵직한 사업으로 몇 개만 진행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위원장님, 조금……

추가 질의 시간이 있습니까?

○委員長 秋美愛 예, 다음에……

○홍희덕 위원 예, 그러지요.

알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추가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다음 질의 순서는 조해진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장관님, 실업급여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조해진 위원 그런데 지금 고용보험료는 오히려 더 수입이 감소될 전망 아니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조해진 위원 그렇게 되면 고용보험기금 적자 규모가 굉장히 확대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원래 고용보험기금은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또 그 적립금이 많아집니다만 경제가 앞으로 계속 어려워진다고 할 때는 재정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가장 나쁜 결과로 온다면 적절한 대안을 재정 당국하고 협의해서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고용보험료를 인상한다든가 일반회계에 전입을 한다든가 공적자금관리기금 차입 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지금 지속되는 형태로서는 아직 그렇게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그동안 저희들이 판단해 왔습니다.

○조해진 위원 지금 상태로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7년에 당기수지 적자가 1069억이었는데 올해는 2조 4000억까지로 추산되는 걸로 자료가 되어 있던데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런데 지금 전체로 그 적립금 규모가 제가 정확한 숫자를……

우리 고용정책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예.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고용정책관 이재갑입니다.

금년도에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커지기 때문에 단기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적립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 저희가 정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반영했을 경우 에 연말 적립금은 5조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작년은 8조 2000이었고 금년이 되면 5조, 그래서 한 3조 정도 줄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하여튼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

○조해진 위원 그다음에 훈련 수당이나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참여 수당을 늘려야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조해진 위원 그것은 필요한데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하고, 행정안전부의 그 사업 때문에 노동부가 하는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

사업이 좀 지장을 받을 염려는 없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다소 그런 우려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출발점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총리실에서 이런 다소 정부의 중복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하는 고용 및 사회안전망 TF 회의가 있고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 과정에 있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또 다른 우리 노동부의 프로젝트가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게끔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하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이게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걱정하는 시각이 많거든요? 저희 지역으로만 내려가 보더라도 농사 일용노동을 하던 분들이 가서 고 되게,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 여기 가서 편하게 하고 돈도 더 받고, 그래 가지고 당장 지역에 농사 일손이 갑자기 지금 구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런 예상치 않았던 부작용들이 곳곳에 있고, 그래서 IMF 때 공공근로와 같은 그런 나쁜 결과들, 본래 취지하고 다르게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부작용들 때문에 나쁜 결과들이 오지 않을까 염려하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부처 간 업무 조정……

행안부가 원래 이 사업을 구상할 때 우리 노동부하고 따로 협의를 안 했겠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희들 의견을 전달하기는 했습니다.

○**조해진 위원** IMF 때처럼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처 간 협의 때 말씀을 좀 잘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지역고용촉진지원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연내 집행이 가능할까 하는 염려가 좀 있거든요? 해당기업들이 원래 기업이 잘 안 되어 가지고 폐업이나 대량 실업이나 이런 게 발생한 지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업하기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새로운 업종의 새로운 기업이 들어가 가지고 공장을 이전하거나 신설하거나 증설해서 고용을 창출하기까지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동부가 그것 기준을 세우고 선정을 하고 또 지원을 하고 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게 집행이 이루어져 가지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준비가 면밀하게 되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거든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거나 우려가 있는 또 그러한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합시다. 만약에 경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서 이럴 필요가 없게 되면 이것이 불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 경제 여건 문제로 볼 때 이런 지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 저희들이 대비를 하는 것이고.

물론 그런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한다든가 고용을 만들고 하는 것이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러한 기간으로 볼 때 조금 늦어지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금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발생했을 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희들이 면밀히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될 때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것은 전혀 없이 신속하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말하자면 그런 지정을 한 지역이 나오게 되면 이런 집행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혹시 그런 규모가 조금 더 커진 다든가 해서 또 좀 경기가 활성화되면 그것이 좀 더 부추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또 이 기금운용계획을 조금 변경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리고 좀 전에 홍희덕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 않나 싶은데 경과적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조해진 위원** 이게 공공근로하고는, 홍 위원님은 공공근로하고도 유사하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과는 다르다고 지금 설명을 하셨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라고 하셨는데요.

거기 대상인 취약 계층들, 그러니까 노숙자나 장애인이나 고령자나 장기 실직자나 이런 분들의 상황을 보아도 그렇고 이게 자칫하면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일회성으로 그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일자리로……

사회적 일자리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조해진 위원** 분야도 그렇고 그 성격도 그렇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또 사실 좀 회의를 갖는 시각이 있거든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 경과적 일자리는 다소 좀 직업 훈련적 요소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NGO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참여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또 그 참여자가 그 기간 동안에도 고용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또 상담에 참여를 하고 해서 연계를 시켜서 실제 그런 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안정적인 일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목표로 합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일자리는 근로자에게, 같은 대상의 취약 근로자입니다마는 온전한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일자리로 전환시키기 위한 하나의 중간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이것도 우리가 좀 설계를 면밀하게 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 관리를 하지 않으면 진짜 취로사업처럼 되어 버리고 넘어갈 우려도 있기 때문에 잘 좀 관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보도도 나왔는데 경제가 나빠지면서 실업교육급여 부정 수급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럴 유혹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조해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저희들이 실업자에 대한 부정 급여 또는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고 장치를 상당히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적발해 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물론 완벽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누수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런 분야의 전문적, 그런 것을 관리하고 적발하고 또 다스리고 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경험이나 기능을 가진 분들을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하고 연결해 가지고 채용해서 그 일을 맡기면 어떤가 하는 그런……

○**노동부장관 이영희** 현재 고용지원센터 내에 부정 수급 문제를 전담하는 그런 인력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 앞으로 더 좀 수요가 생긴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안도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고맙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조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체토론 순서는 김상희 위원님 차례가 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장관님, 지난번 11월 노동부 예산 심사 시에 환노위에서 부대의 견을 달았던 것 기억하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김상희 위원** 부대의견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정규……

○**김상희 위원**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 노력과 함께 교육훈련 지원 강화, 고용보험료 경감, 정규직 전환 지원금 도입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할 다양한 정책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이게 첫 번째였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김상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근로조건 악화가 우려되므로 직업상담 공무원 및 근로감독관을 확충하는 문제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에 대비하도록 할 것”

그리고 세 번째, “정부 지원 청년 인턴제가 사중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경감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부대의견 달아서 통과시켰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김상희 위원**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본회의 결의안으로 채택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김상희 위원**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때는 이런 부분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그것 하도록 한다고 장관께서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전혀 그게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이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글썽요, 우선 인적 층원 문제는 저희들이 관계기관과도 협의했습니다마는 사실 공무원의 정원 문제는 전체적으로 쉽게 풀기 어려운 문제인 것을 이해해 주시고……

○**김상희 위원** 지금 경제 위기 그리고 고용 대란, 실업 대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장관께서 충분히 설득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제가……

○**김상희 위원** 인턴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질의하신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인턴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청년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인력난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예산 통과시킬 때 다음 추경에 이런 것들을 반영시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 촉진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예산이 없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담원 관련해서도 전혀 없습니다.

본회의에서 결의안까지 채택한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소신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간 연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소신을 갖고 계시다 하더라도 입법부의 의견, 환노위의 의결 그리고 본회의에서 결의안으로 채택한 것을 이렇게 무시해도 괜찮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무시한 게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의 경우에 저희들이 법안을 냈는데……

○**김상희 위원** 법안 내신 것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법안을 냈는데 거기에 차별 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하는 것을 했고……

○**김상희 위원** 저희가 이 결의안을 채택한 그 의도를 잘 알고 계실 텐데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아닙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 경감과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사실상 성격을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법안을 별도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출을 하

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 지원하는 것이 장관 소신으로서는 지금 필요하지 않다, 비정규직 기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도 국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하고 또 본회의에서 결의안까지 채택을 했으면 그래도 입법부를 존중해서 평이라도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래서 이번에 법안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김상희 위원** 그 법안 제출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

○**김상희 위원**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장관님과 지금 논쟁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에서, 장관께서 소신은 그렇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저희 심의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 6000억과 그리고 직업상담원, 근로감독관 증원하는 165억 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추경 편성 원칙을 보면 기획재정부에서 적시성, 집중성, 한시성을 편성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부의 예산을 보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입법부의 의견도 전혀 존중하지 않고 그리고 정부에서 제시한 이런 원칙에도 좀 많이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부 사업 중에서 집행실적이 굉장히 부진하면서 정책 목표가 뚜렷하지 않고 그리고 시행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 예산들은 삭감해야 되겠다,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부분은 지난번에도 계속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도 여당의원들도 많은 질의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644억 원이나 내셨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실적률이 16.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정말 프로그램 내용도 부실하고 지금 민간기업의 참여율도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대로 지금 추경에 54억을 올려 왔습니다. 이 부분도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고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직업안정기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또 청년인턴 700명 충원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지금 청년인턴 제도를 이렇게 정부에서 고용대책으로 남발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부분은 앞서도 지적했지만 이게 지금 사실 실효성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취업장려수당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 건설노동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저는 굉장히 같은 의견입니다. 상당히 이 부분은 시행 효과가 굉장히 불투명한 부분이고 너무 충분한 고려 없이 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동부 사업 중에서 집행실적이 다소 부진하더라도 어떤 부분은 사실은 원안을 유지하거나 증액이 좀 필요한 사업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패키지 지원 사업의 경우에 실적률은 23.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공수당이 100만 원 지급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의 우리 경제 상황이나 국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오히려 증액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규실업자 훈련 사업의 경우에도 실적률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추가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 사업 그리고 신규실업자 훈련생계비대부와 관련된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현재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생각할 때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증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관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여성들의 취업자 수가 전체 감소된 취업자 수의 98%에 해당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알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김상희 위원 그런데 이게 2008년까지는 여성가장들이 취업 훈련을 참가할 때 교통비와 생계수당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통비만 지원하고 생계수당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여성취업자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취업 훈련과 고용을 증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 가장들에 대해서는 취업 훈련 시에 생계수당으로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그런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김상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생각해서 또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의 말씀을 많이 주신 것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이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더 힘을 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회적 일자리 확충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지적과 홍 위원님 지적도 있었는데요, 경과적 일자리라는 하는 새로운 그런 신규사업이 아니라 사회적 일자리 확충 사업으로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현재 고용보험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실업자들이나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국민들이 자기의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은, 제가 보기에 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면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잘 알겠습니다.

다만 하나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이나 이런 게 지금 실적이 빈약하다 또 사실 저소득층 지원 패키지도 지금 현재 실적을 보면 빈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빈약한 이유가 저소득층 지원 패키지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 알리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직 집행실적이 올라가지 않아, 최근에 보고를 받아 보면 전망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니다.

그리고 청년인턴 문제도 이것이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그 위탁기관에서 이 사업을 전개하는데 그동안 좀 과정이 더뎠을 뿐이지 지금 이 부분도 상당히 성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2만 5000명 하려고 한 것을 그것이 금년도 상반기에 거의 소진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1만 2000명을 더 지금 추가로 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김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토론 순서는 박대해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대해 위원** 박대해 위원입니다.

유례없는 경제 위기로 인해서 노동부에서 2조 8484억 원이라고 하는 슈퍼추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IMF 이후에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주무장관으로서 이에 대해 간단하게 한 말씀 해 보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실제로 IMF 이후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현재 실업자 수로 본다면 IMF 때까지는 아직 미치지 않는 것 같고 또 국민이나 전체 분위기는 아직 그런 절박한 위기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IMF 때와는 달리 회복 기간이 상당히 오래 가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박대해 위원**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고, 구직단념자를 포함해서 360만 명에 달하는 실질실업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일자리 지키기와 저소득층 지원 등을 위한 재정 지출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예산 편성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짚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안의 가장 큰 특징은 추경의 목표와 고용안정 및 근로자 생활 안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까 현금 지급성 사업이 많다는 것입니다.

노동부의 추경안을 보면 일자리 나누기 지원 6개, 청년 고용 촉진 4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촉진 9개, 생활안정지원 5개, 기타 11개 등으로 총 35개 사업에 2조 8484억 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중 현금 지급성 사업은 실업급여 등 총 6개 사업에 1조 5444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추경예산 증액의 54%에 육박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금 지원 정책은 필연적으로 부정 수급 등 부정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로 실업급여만 예를 들더라도 2007년에는 부정 수급자 1만 5500명이 적발이 되었고 이들이 부정 수급한 돈은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부정 수급 환수 실적은 부정 수급 100억 원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에는 부정 수급자가 1만 9000명으로 전년도의 23%나 증가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원금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부정 수급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우리 노동부 사업은 다른 건설 사업이나 다른 부처와 같이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동한 여러 가지 체계를 보다 더 강화를 하면, 그런 노력을 다각적인 것으로 전개를 하면 상당히 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기업들을 단위로 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크로스 체크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것은 발각될 가능성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끝까지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김재윤 간사와 사회교대)

○**박대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어렵게 편성한 지원금이 부당한 곳에 집행되지 않도록 장관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2월 25일인가 국내 30대 그룹과 전경련이 발표한 잡세어령 방안, 현재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서 그런 실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대기

업에서도 그런 것을 동참하는 어떤 행사도 있고 했습니다만, 이 잡세어링이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 나누기 또는 일자리 늘리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100인 이상 기업으로서 한 6700개 기업에서 보니까 지금 통계로는 한 23% 정도가, 한 1500개 기업이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대해 위원 지금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잘 추진 안 되고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잡세어링을 위해서 노사가 서로 함께 노력하고 있는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박대해 위원 잡세어링, 워크세어링으로 표현되는 일자리 및 일감 나누기의 근본 취지는 고용 유지 즉 일자리 지키기라고 보는데 현재 정부 방안은 이보다 일자리 늘리기에 주력을 함으로써 핵심 원칙을 비켜나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용 유지와 고용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만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만, 이를 위해 신입 또는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삭감에만 중점을 둬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임금 삭감은 노사 합의를, 사회적 합의를 할 때에도 임금 동결, 반납, 절감을 노동 쪽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용의를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이 굉장히 악화된 경우에는 노동 쪽에서 스스로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납해서 일자리를 유지해 달라고 하고 있고 그러나 경영 상태가 좀 괜찮은 기업의 경우에는 사실 임금 삭감하지 않아도 괜찮은 기업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업도 어려움에 동참하기 위해서 인턴을 채용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해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런데 또 정부에서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계획된 공공기관의 정원 감축안을 바꾸어서 연내에 일괄 감원을 끝내라는 그런 지침

을 내려 보냈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건 정원에 대한 감축입니다. 실제로 현재 있는 인원을 쫓아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박대해 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이게 일자리 나누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정책이 아닙니까?

이게 뭐냐 하면 말이지요, 앞에서는 고용 유지 하자고 잡세어링을 하면서 뒤에서는 정리해고를 하라는 이런 모순된 정책 말이지요,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이율배반적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또 선진화를 가야 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 과제도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운 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기업 선진화, 경영 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새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추진되어 온 일이기 때문에 경제 위기라고만 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스톱할 수는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점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박대해 위원 지금 현재 이 지침에 따라서 정원을 감축한 공공기관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공공기관이 대체로 그런 방침에 따라서,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대해 위원 또 더한 문제는 임금을 삭감해서 일자리를 나누자는 이 좋은 취지가 정규직 신규 인력 채용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인턴직 채용으로 변형되어서 인턴만 양성하는 행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인턴 채용이 끝나는 6개월 내지 10개월 후에는 인턴은 해고가 되고 직원들의 임금 수준만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글썽요, 지금 임금 삭감이라든가 그것이 경제 위기에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겠고 아니면 아예 임금 기준을 낮추는 삭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턴을 채용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반납 형태로서 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는 지금 기업으로서도 인턴 중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 부분을 넘어선 인턴을 채용하는 것은 그래도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임시적으로 주어서 아주 조금이라

도 안정을 누리도록 하자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대해 위원 어떻게 다시 한번 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까.

신규 실업자 등 직업훈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법상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분들은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규 실업자 등 직업훈련 사업은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일반회계로 훈련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도 직업훈련의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자영업자 수?

○노동부장관 이영희 한 500만 정도,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몰라서. 한 500만 명……

○박대해 위원 제가 확인한 것은 한 601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601만 명을 비율로 따지자면 지금 취업자 2382만 명 대비 약 25.2%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 내용을 보면 훈련대상자 규모가 5만 2000명에 불과해서 수혜자가 너무 적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까.

영세 자영업자 601만 명 대비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2003년에서 2006년 사이 연평균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몇 명인지는 아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박대해 위원 저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에 75만 6000명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 규모 5만 2000명은 소상공인 연평균 폐업자 75만 6000명의 6.8%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삼십%는 되어야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영세 자영업자가 어려울 경우에 본인이 스스로 완전히 고용시장으로 나아

가서 피용자로서 일을 하겠다, 임금근로자로서 일을 하겠다라고 할 때 직업훈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분들이 상당한 부분 그런 근로자로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그대로는 시행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이번에 110억 원 정도의 규모를 반영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데에 참여가 상당히 많아지고 한다면 앞으로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그분들의 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박대해 위원 이 사업 수요자 추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부가 동 사업비 추산 기준으로 잡은 자영업자 폐업률이 18.1%인데 이 폐업률은 국세청에 등록된 공식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은 다른 수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통상 약 200만 명의 미등록 영세 자영업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포함할 경우 실제 폐업률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동부가 기준으로 삼은 18.1%의 폐업률은 2006년 기준입니다.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비해 2009년 현재 경제상황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 수가 정부 예측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사업비를 보다 증액하고 더 나아가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보다 확충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간단하게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 이영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훈련비용을 저희들이 책정한 근거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작년에 폐업 예정인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자영업자의 6.5%가 실업자 훈련을 받겠다, 대단히 적은 숫자가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반인 약 3%가 실제로 훈련에 참가할 것이다 하는 전망하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영업자가 스스로 이제 자영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포기하고 또 스스로 완전히 고용시장 쪽으로, 노동시장 쪽으로 나오겠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계속 더 큰 지원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대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윤** 박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한나라당 용인시기흥구 출신의 박준선 위원입니다.

봄에 좀 후덥지근한데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노동부의 안을 보니까 적은 살림으로 알뜰하게 가계를 꾸려 가는 알뜰한 주부의 어떤 고민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나라가 어려운데 실업자도 구제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일자리도 유지하는 어떤 고민의 흔적이 엿보여서 아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은 노동부 관련뿐만 아니라 이번 전체 추경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잠깐 우리 김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이것에 대한 직접 지원이나 아니면 간접 지원이나 하는 것이 초점일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또는 우리 김상희 위원님 같은 분은 직접 지원을 해서 1인당 50만 원씩 해서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을 전환한 기업에게는 1인당 얼마씩 지원을 하자는 얘기인데 그에 반해서 노동부에서는 지금 정부안으로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국회로 보내겠다는 얘가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지금 물론 우리가 나라 살림이 아주 넉넉하고 그렇다면 기업이 어려울 때 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사회보험료도 감면해 주고 직접지원도 하고 할 수 있는 것 다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한정된 나라 살림으로 또는 한정된 예산으로, 그중에서도 추경이나 이런 한정된 나라 살림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 돈을 쓸 것인가를 고민할 때는 아무래도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래서 직접 지원이라는 것에 대한 선택이 좀 어렵다라는 것이 현재 정부 입장이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직접 지원을 하는 전환비용을 직접 주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사실 우선 우리가……

○**박준선 위원** 간략하게.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원 대상을 우리가 정하는 데 있어서 이의가 없고 액수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때 방법이 직접 지원이나 간접 지원이나가 문제입니다.

직접 지원의 경우에는 실제로 사회보험료 감면에 비해서 행정 부담이 우선 굉장히 큼니다. 그다음에 부정 수급의 가능성이 더 큼니다. 그리고 또 직접 지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만 가지고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큼니다. 그런데 4대 사회보험료로 가지고 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이런 쪽까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부담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지금 5인부터 299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4대 보험료를 2년간 50% 감면하는 안인데 그러면 그게 1인당 한 50만 원 정도 됩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2년간 155만 원으로 저희들이 추계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자는 그것의 어떤 효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어떤 것을 독려하는 효과의 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희들은 그 액수가 2년간이기 때문에 한 3800억 정도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6개월간 우선 이번 이 예산에서 6000억, 그다음에 그것을 또 1년간으로 다시 내년도에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 말하자면 1조 2000억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우선 액수의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약 20만 명 정도가 수혜를 입을 것이다, 6000억~1조 2000억을 지원해 주면, 그것에 대한 어떤 사회보험료 감면 효과는 아주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희들도 실제로는 한 20만 명 정도의 수혜자가 사실상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것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는 요건은 2년차가 되었을 때 이 기간이 연장됨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전

환할 가능성을 기대했는데 안 됐다 하는 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은 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야당의 경우에는 그와 관계없이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대상을 넓혀서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폭에 차이가 있고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이 주는 효과는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현재 6개월간에 한 100만 명을 우리가 증대할 때 20만 명 정도밖에 효과가 가지 않는다는 것은 나머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전혀 효과가 가지 않는 것이고 결국 그 사람들은 해고당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지나친 인센티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6000억~1조 2000억의 추경, 그런 직접 지원금 말고 올해 어쨌든 사회보험료를 감면한다는 것은 역시 국고에서 그만큼의 수입이 줄어드는 거니까 지원하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나랏돈이 나가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들어올 게 안 들어오고, 그 분야로.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어차피 고용보험료 쪽에서 나갈 테니까.

그러면 그것이 올해에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사회보험료를 감면한 효과가 액수로?

○노동부장관 이영희 올해는 75만 원입니다.

○박준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총액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될 거냐는 거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러니까 한 1700억 정도 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1700억?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박준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범위를 더 확장하면 안 되겠어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것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더구나 이것이 사회보험료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그동안 많은 절충을 거쳐서 50%에 대한 감면을 저희들이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감면의 폭을 70%든 더 하게 된다면 더 효과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준선 위원 지금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일부라도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는 건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글썽요, 그……

○박준선 위원 100인 이하 사업장이라든가 지금 추경에서 직접 지원한 것을 병행해서 할 수는 없을까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한다면 하나로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보험료 감면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 근로자를 고용보험이라든가 거기에 가입을 시켜 놓아야만 자격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조건이 안 생길 때는 사용자가,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보험 가입은 시키지 않고 부정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요소도 있고 받고 난 뒤에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확실한 효과를 생각할 때는 이런 틀을 가지고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절충적으로 병행하는 것은 곤란하냐?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중에서 고용 인프라를 구축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추경 예산이 좀 편성된 것 같은데 그것이 대부분 인턴사원이 되어서 사실상 전화를 받는다는 거고 이런 인력을 충원하는 데 그치고 전문적인 인력으로 해서 고용 지원을 하는 것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 인력을 조금 확충하기 위해서 그나마 한 것이 노사 공동 재취업센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거기의 상담원들은 상당히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인턴이 아니지요.

그래서 저희 노동부로서는, 사실 고용지원센터가 81개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부족합니다. 또 인력도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좀 더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솔직히 저희들 기대입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박준선 위원 그러니까 이번 한정된 추경 중에서 노동부에서 하는 것 중에 지금 전반적인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고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노동시장이나 이런 것들의 활로가 막혀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고용지원

센터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테고, 실제로 지금 천안고용지원센터 통계의 경우에는 직업 상담원을 2명에서 5명으로 늘렸더니 알선 성공률이 2008년 5월에는 525건이었는데 2008년 5월, 6월에는 한 2배 정도 늘었다—2.2배 정도—라는 통계를 제가 받았는데 이런 것으로 봐서도 일단 전문적인 취업 상담원 또는 인터넷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제공 이런 것들에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좀 더 투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모두에 칭찬을 좀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덜한 것 같은 흔적이 있어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만 반영을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 환노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윤** 박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아 위원** 장관님, 정말 장시간 동안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질의가 직접 지원이 효율적이냐 간접 지원이 효율적이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박준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답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이번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는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금을 주로 목적으로 해서 실업 등에 대한 고용보험은 2조 1157억 원을 증액해서 기존보다 37.4%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업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또 많이 발생할 것인데 임금 체불에 의한 근로자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제가 뒤편에 보니까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 체불 근로자에 대해서 생계비를 대부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게 있던데요. 근로자에게 이것은 사실 생계비를 대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여겨지는데 왜 임금채권에 대해서 추가 기금운용계획이 없고 체불 근로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대부 형식으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임금채권기금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산되었다든가 기업이 그렇게 되었을 때 지불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기금으로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그 기금은 법정의무기금으로 기금계획변경이 행정부 자체 변경으로 가능합니다.

(김재윤 간사, 조원진 간사와 사회교대)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올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734억 원 정도를 당초 예산안에서 추가 편성을 해서, 그러니까 약 35%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정 요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대줄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되고, 체불 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대부는 체불 기간 동안 생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대부를 해 드리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두아 위원**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계시는지 저희가 이 부분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또 신규 사업 중에서 무급 휴업 근로자 지원 사업 및 고용유지자금 대부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는 무급 휴업 전환 예상 비율을 30%로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무급 휴업은 우선…… 지금 기업이 어려울 때 휴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보통 경우에 휴업을 하게 되면 기업이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고용보험기금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의 경우에 그 금액의 4분의 3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지원해 주더라도 감당할 수가 없을 경우에 무급 휴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무급 휴업에 준하는 것이 평균 임금의 40% 이하밖에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급 휴업이라고 간주를 하고, 그 경우에 사실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무급 휴업이라

고 하게 되면 실직 상태나 마찬가지로입니다. 다만 회사에 적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그 계산은 대체로 일반적인 휴업 근로자와 여러 가지 관계를 비교해 볼 때 실제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그 정도다라고 하는 경험적인 계산에 의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아 위원 경험적인 통계 확률로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이두아 위원 그러면 무급 휴업 근로자 지원 사업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보기에 겹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노동부장관 이영희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두아 위원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러니까 그 앞의 부분, 고용유지지원금이 둘 다에 해당되고요. 한 경우에는 그냥 사용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휴업이고—그러니까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70% 지급을 해야 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휴업—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아도 허락을 받아서 되는 그런 휴업입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책임을 안 지지만 근로자는 그 결과로 인해서 아무런 급여를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실직 상태인데? 실직하게 되어서 만약에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평균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사실 구직급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근로자들에 대해서 평균 임금의 40%를 지급하겠다, 왜 50%가 아니냐? 실제로는 10%는 아직도 고용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저희들이 뺀 겁니다.

○이두아 위원 아, 그렇게 보시고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이두아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사업자에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히려 중소기업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으로 통합을 하거나 대기업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기업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 같은 것을 신설해서 저리 대부 사업을 확대 강화하거나 이런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 좀……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런데 무급 휴업의 경우

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휴업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줄 리가 없습니다.

○이두아 위원 고용유지지원금이……

○노동부장관 이영희 고용유지지원금 자체는, 실제로 휴업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휴업 상태가 발생하게 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 사용자는 응당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 있어서는 도덕적 해이라는 현상은 좀 생기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부자금은 기업이 고용 유지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전면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일부적으로 한다면 이럴 때 역시 임금을 일부 지급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 지급하기 어려운 재정적인 상황이 생길 때 그 임금 부분에 관해서 대부를 받아 가지고 우선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두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사업 대상 51만 8176개소 중 536개소에 불과해서 수혜율이 0.1%에 그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지원율이 8.6%이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원율이 0.05%에 그치는 등 사업 대상 사업장에 비하여 지원받은 사업장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아니한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이게 활성화되는 데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일반회계로서 우선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대체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사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신청은 우리가 아주 광범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재원을 좀더 많이 확보하면 더 적극적으로 권장을 갖다가 할 수 있겠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상 가능하다면 좀더 확대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두아 위원 구체적으로 방안 같은 건 뭐 특별한 대책이 없으신가 보네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좀더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두아 위원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사 상생 협력이 정착되려면 수년에 걸쳐서 지원을 해야 효과가 극대화 되니까 특정 사업장에 대해서 중복 지원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신규 사업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생길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 그에 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이런 부분은 저희 노동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심사를 하고 계속 지원을 받는 경우는 차순위로 돌리고 새로, 신규로 신청하는 노사단체 쪽이랄까 이런 쪽을 우리가 더 지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두아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랑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청년 취업 지원 제도가 99년부터 시행되다가 효과가 미비하다고 2005년 폐지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2009년에 제도입되게 된 배경에 또 달라진 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설명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처음에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가 실제로 이게…… 결국 경제가 좋아지면 이런 부분이 그렇게 효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볼 때 별로, 큰 효과보다도…… 그렇다 그래서 이게 중단하게 되었습니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다시 증폭되면서 이 부분이 도입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종래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을 했습니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6개월 동안 인턴으로 임금의 50%를, 이것은 실제로 지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그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고용을 계속하면 같은 조건으로 6개월 더 지급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근로자가 말하자면 중소기업에 안착할 수 있는 제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인턴사업이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나중에 취업해서 완전히 정규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평

가는 좀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두아 위원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원진 이두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 위원 김재윤입니다.

장관님!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김재윤 위원 이번에 노동부 추경예산 증액 규모를 보면 2조 8484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예산은 2399억 원, 기금은 2조 6085억 원입니다.

지금 증액되는 게 대부분이 기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업대책이라든가 일자리 나누기 대책, 대부분 정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거의 90%에 가까운 예산이 기금인데 이게 오히려 기금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만약에 기금의 건전성이 악화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정부가 다른 조치로서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워낙 고용보험기금 자체가 경제위기라든가 이런 때를 대비해서, 고용이 악화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 지출 계획을 세운 것 자체가 좀, 비판의 여지는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또 반드시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김재윤 위원 특히 고용보험기금이 대다수인데요. 고용보험기금은 노사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김재윤 위원 그러면 지금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세울 때는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왜냐 하면 지금 이 위기가, 알지 않습니까? 국제 경기의 악화, 그런 걸로 지금 정부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노사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예산 편성 원칙에

맞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러나 한편으로 볼 때 세금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내는 건데 국민을 보면 결국은 근로자와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기금이라고 하는 것도, 또 노사라고 하지만 국민의 한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김재운 위원** 그래도 예산 편성의 원칙에는 맞지 않은 것이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물론 고용보험 쪽으로 해야 될 부분과 또 보다 일반예산으로 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이 구분되고 일반예산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좀더 많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옳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지금 고용보험기금 같은 경우에는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면 기금 안정과 관련한 그런 대책까지도 같이 세우고 나서 추경안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대책을 필요하게 되면 당연히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직 그러한 단계까지는 안 갔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 보시는 그런 예산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고용보험료의 수입이 감소할 것이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임의 가입 허용 등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기금이 더욱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것은 앞의 문제, 장래문제는 미리 예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또 조심스러운 관측은 경제가 조금 회복되는 조짐이 보인다 이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부분은 역시 좀더 시간이 경과한 후에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재운 위원** 나중에 또 이 부분이 기업과 노동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부가 다른 조치로서 대안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국고 지원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모색해야겠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청년 실업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일을 할 수 있어야만이 결국 우리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인데요. 지금 노동부의 청년 실업 대책이 단기적이고 임시 방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많은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 주로 인턴이라든가, 물론 그 안에 중소기업 인턴의 경우에는 정규직 취업을 전제로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만 인턴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상당한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부러 그런 바람적이지 않은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고, 결국 좋은 일자리는 기업에서 창출해야 되는데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사실 임시적인 하나의 조치로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김재운 위원** 그래서 임시적인 조치를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도 한시적인 공공근로자나 단기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제도를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청년들을 취업하게 하면 인센티브를 더 주는 그런 제도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인턴제보다는 정규 직원을 채용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만들어야 되겠지요. 지금 거의,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좋은 일자리 만드는데 노동부가 더 힘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서도 새로 한 것은 청년들이 한편 중소기업으로 가기 기피하는 경향과 또 중소기업에서는 일손을 구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취업장려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신설해서 청년들이 그쪽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제도도 사실 신설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청년 실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치밀하게 세분화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저희들이 좀더 많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리고 경기가 침체되고 고용이 불안할 때마다 비정규직의 문제가 더욱더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없이는 고

용이 안정될 수가 없고,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가 없고 또 이를 통한 내수 회생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고용도 안정되고, 소득의 양극화도 해소되고, 내수 회생도 가능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사회 갈등도 그것 최소화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대단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노동부가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노동부의 안을 보면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가 저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회보험 부담금 지원을 통해서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것만 가지고는 정규직 전환이 어려울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인센티브의 한 수단이고, 사실 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다른 어떤 단체는 800만 명이랍니다. 이 800만 명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또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제한해서 보더라도 260만 명입니다. 이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 경제가…… 아마 국민소득이 지금 한 2배로 늘어나지 않는 한 해소가 안 될 겁니다. 이 해소는 저는 경제력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지 제도로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업이 그래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어떤 의욕을 갖게 해야 되고 또 그럴 때 인센티브가, 하나의 요인이 작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로지 돈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주어서 정규직으로 하게 한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실질적인 효과도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타깝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좀더 여러 가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그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위기상황일 때 특단의 대책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해결책을 찾자는 것이지요. 그게 첫 번째가 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

에 대해서 1인당 월 50만 원씩 12개월간 600만 원을 지원하자 이거지요.

(조원진 간사, 추미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제도를 계속 쓰자는 게 아니라 3년간 우리가, 경제위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3년간 한 시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3년간 연간 20만 명을 지원하면 약 한 3조 6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투여하면 정말 정규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그런 계기를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김 위원님의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존중되어야 될 측면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 국가의 재정은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20만 명의 비정규직,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20만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시켜 쓰는 돈이 우리가 볼 때, 지금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실직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얼마입니까?

그 사람들을 오히려 우선 지원한다면, 그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쪽도 많이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런 데서 여력이 있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데 써야겠다면 저도 절대 동의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여러 가지 재정규모를 볼 때 그렇게, 그 많은 돈을 그쪽에 쓰는 것은 대단히, 형평성에 있어서도, 저는 사회적 형평성에 있어서도 그것은 옳지 않다……

○김재운 위원 오히려 고용이 안정되면…… 그리고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되고요. 그다음에 내수 회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갈등도 더 줄어들고…… 그러면 더 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가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지면 사회 안정이 이루어지고 또 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다른, 일자리가 없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요. 이런 역할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으로 가는 것보다 정규직으로 가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직을 선호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노동부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방금방 임시 방편식으로 한다면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들을 다소 더딜지는 모르지만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그리고 또 각 세분화해서, 그런 정책들을 세워야만이 이 고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만 사실 지금 양극화라는 게 두 가지 측면으로 저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취업 근로자 속에서 양극화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양극화입니다. 그러나 전체 근로자에서 양극화는 취업자와 실업자 간의 양극화입니다.

그럴 때 우선적으로 정책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 쪽에 지원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경제 회복을 위한 효과도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가장 큰 비중은 실업 근로자들에게 주어져야 되고 그다음은 물론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격차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차별 해소, 차별 해소에 보다 더 강한 역점을 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이 비정규직을 굳이 써야 할 이유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 펴야 된다고 보고 저희 노동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우리 국회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고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쓰도록 주문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국회 전체에서 결의안으로도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법 개정안을 낸 것도 실제로 지금 취업 근로자 속에서 이루어지는 양극화를 비정규직을 완전히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서 하나로 만들 수는 없는 상황에서 불과 전환시킬 수 있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람이 한 20만 명이라고 해 봅시다. 나머지는 비정규직으로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단 해고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정규직이 들어 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들을 간과하고 계시는 게 저희들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런 적극적인 정책을 펴도록 국회가 주문한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안에도 그런 예산이 편성됐어야 했었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아까 말씀드렸습시다마는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추가 법률안을 제출해서, 사회보험료 감면 부분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나머지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진 위원** 장관님, 제가 오늘 이제 이 비정규직의 문제가 중요한 시점이 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사실은. 그동안에 비정규직에 대한 얘기들을 사실은 많이 다루지 않았는데 우선 전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11조 2000억 그다음 17조 7000억, 28조 9000억의 추경안이 나오는데 정부의 성장률, 플러스 3% 성장에서 마이너스 2%로 성장률이 떨어짐으로 해서 세수가 감면, 세수 감면 부분이 11조 2000억 정도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전에 환경부의 토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우리가 IMF 때 10조, 지금 22조 정도 되는데, 빚을 가지고 이 추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노동부에서와 계신 분들이 빚을 가지고 추경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되고 적재적소에 써야 되고 또 쓰더라도 효율성이 있도록 써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는 데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선진당은 선진당대로 안을 냈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조원진 위원 우리 정부안은 4대 보험의 50% 감면을 2년 동안 해서 약 22만 명 정도의 비정규직에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전체 금액으로 보면 연간 155만 원 정도다, 그런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정도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고 야당의 안도 어느 정도 합리성은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야당이나 여당이나 정부나 목적이 같다는 거지요.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는 데 어떤 방법으로 갈 거냐, 방법만 다르지 목적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목적이 같기 때문에 저는 이 비정규직 개정법이 이제는 상임위에 상정이 되어서 다뤄져야 된다, 이게 다뤄지지 않고 2조가 무슨 중요하고 6000억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공론화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법을 다루는 상임위가 6월 30일 날 시한제 법이 끝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론화시켜서 대체토론도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라든지 이런 공론의 장이 이제는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이 법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봅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문제를 안 다루면, 결국 그 시한을 넘기게 될 경우에 새로 재계약을 할 경우 2년이 추가된 부분을 그 해당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는 한, 또 계속 고용하면 정규직이 되기 때문에 기업이 해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선 추산으로는 한 6개월 사이에 100만 명 정도가 해고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사실은 우리가 이 법을 만들 때 우리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이 좀더 정규직화 가자,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조원진 위원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

환율을 좀 높여보자 하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거의 2년 기간이 지났는데 일자리를 잃는 사례가 더 많았다, 이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정규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민주노총에서 3월 24일 날 금속노조 사업장 비정규직 14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비정규직이 해고된다는 게 75.8%입니다. 이게 노동부에서 한 게 아니에요. 정규직까지 해고하겠다는 게 14.7%고, 정규직·비정규직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게 9%밖에 안 됩니다.

또 말씀드릴까요? 전경련에서 리서치 앤 리서치에다 의뢰해서 금년 3월 19일 비정규직 514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고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80%입니다. 불필요하다는 게 14.8% 나왔습니다.

요 근래 조사만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MBC 라디오의 성인 남녀 2130명, 2월 11일 엠브레인에서 조사를 했는데 폐지 또는 4년 연장을 해야 된다가 59%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읽어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요.

매일경제하고 대한상의에서 300대 기업에 1월 21일 날 조사를 했는데 단 1명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겠다고 38% 나왔어요.

이게 최근의 조사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6개월 동안에 100만이 되든 70만이 되든 엄청난 과급효과로 간다, 지금, 결과적으로. 한 군데도 아니고 최근 3개월의 여론조사에서 결과가 이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6월 30일이 지나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260만 비정규직을 정부에서 돈을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조원진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 20만에 대한 혜택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240만은 어떻게 합니까? 법으로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맞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조원진 위원 법적으로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가져온 6000억, 선진당의 2조, 우리 정부에서

넌 4대 보험 50% 감면, 그것 무슨 소용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부에서 보험료 50% 감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20만 명한테 혜택을 주고 나머지 240만 명이 해고가 들어오는데 그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그 해당자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영향을 줄 수 없는 대단히 하나의 작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법대로 한다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어쨌든 비정규직 근로자대로 남아 있다면 불만이 없을 겁니다, 정규직 전환된 사람은 다행히 전환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남지도 못하고 해고가 되기 때문에 양극화가 아주 더 그냥, 극단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보다도 우선 해고가 될 상황을 막는 문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조원진 위원 저는 지금 이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사실 잠이 안 와요. 제가 환노위의 국회의원으로 생각해보면 잠이 안 오는 게 이게 어느 시한이 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정규직화시켜 줄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시켜줄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기업에다 강제적으로 정규직화시키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조원진 위원 불과 한 달 보름밖에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6000억을 가져오고 2조를 가져와도 그 사람들 어떻게 조치를 하겠나 이거지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예산을 4대 보험에 대해서 50% 감면을 하겠다,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노동계, 정부가 이제는 정말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야 될 때다,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기간제 근로자 피보험 상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상실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자발적인 상실이 있고 하나는 비자발적인 상실이 있는데 2월 달 한 달만 41만 8000명입니다, 비자발적인 상실자가. 이것은 뭐냐 하면 해고입니다, 해고.

비자발적인 상실자가 한 달에 41만 8000명이에요. 2008년 한 해 동안 1174만 명밖에 안 됐거든요. 환산을 해 보면 얼마가 나오니까?

그리고 그 전에 자발적인 상실자가 60% 정도, 2008년 전체로 따지면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인 상실자가 한 4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2009년 2월 달에, 2009년으로 들어오면서 비자발적인 상실자하고 자발적인 상실자가 역순이 되어버렸어요. 53%가 비자발적인, 그러니까 해고로 인해서 상실당한 게 53%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벌써, IMF 때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실적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정말 어려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고령자부터 실적이 소리 없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실업급여를 받아가 본 것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실업급여율 굉장히 높아졌지요. 그다음 해고로 인한 비자발적인 피보험 상실자가 이제는 역전되어 가지고 53% 되었습니다. 그 전에 40%, 39.1%였는데 지금은 53.2%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부분은 공공부문, 은행, 대기업을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가는 확률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 중소기업, 소기업, 5인 이상 100인 이하는 소리고 없이 지금 비정규직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게 실업급여하고 비자발적인 피보험 상실자율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부도 그렇지만 정치권도 그렇고 노동계도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이런 거지요. 현실을 직시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왜? 전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로 좀더 시켜줘 보자, 똑같지 않습니까, 목적이?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조원진 위원 그래서 정부가 좀더 데이터를 가지고 해 달라, 그다음에 좀더 아쉬운 것은 지난 우리 본예산 때 통계에 대해서 제가 90억을 올렸습니다. 18억밖에 안 잡혔는데, 지금 우리나라 통계는 공급자 위주예요. 미국은 공급자와 수요자 통계를 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노동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이 실업이 얼마가 올 건지, 인원이 얼마나 될 건지,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탕에 통계가 갖춰져야 된다, 그런데 이 90억 되는 돈을 거의 다 깎아버리고, 이번에 비정규직 문제 나오다 보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통계가?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런 부분은 어느 예산보다도 더 심각하고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에 통계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 노동연구원을 통해서 조사하는 사업체 고용동향 조사도 우리 조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예산 18억을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더 중기재정계획에다 한 50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반영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경우에는 노동부가 갖고 있는, 운영하는 통계가 가장 고용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것 통계청에서 합시다만, 신뢰성이 큰 그런 통계자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우리 노동부가 독자적으로 그런 통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현실로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부분이 강화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당한 부분이 비자발적인 해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해고냐라고 할 때 하나는 비정규직이든 아니든 경제가 어려우니까 해고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중에서는 비정규직이 우선적으로 해고가 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7월 이후부터는 경제가 좀 나아진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2년차 이상 넘어간 사람은 일자리를 잃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른 이유에서 다시 비자발적 실업으로 아마 저희들 통계에 잡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의 숫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 부분에서 좀 무리한 이 법제도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희덕 위원님!

○**홍희덕 위원** 우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노동부에서 작년에 유휴간호사 재취업 촉진방안이라는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홍희덕 위원** 지금 간호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무직으로 남아 있는 간호사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제가 지금 당장 그대로 답변을 못 하겠는데……

○**홍희덕 위원** 그것 한 7만 5000명 된다 그래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유휴간호사 인력들을 활용해서 취업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노동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07년도 기준으로도 법정인원에 비해 간호사가 약 2만 5000명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작 노동부에서 유휴간호사들의 재취업을 촉진한다고 하지만 자료를 보니까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노동부에서 따로 유휴간호사 인력의 재교육을 통한 재취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간호원 인력 부족의 경우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장관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특히 지방병원 이런 쪽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용지원센터를 통해서 알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에 빈 일자리가 많지만 안 가듯이 그런 데 기피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래서 지금 노동부가 말씀하신 대로 고용지원센터를 통해서 간호협회, 병원협회 등과 연결해서 구인·구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랫동안 쉬었던 간호사들을 재교육해서 연결시켜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노동부에서 유휴간호사에 대한 재교육을 책임지고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구직 활동을 돕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노동부가 유휴간호사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저희들이 여성부와 함께, 여성 새일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간호원들을 대상으로 한 다시 일하기 위한 취업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다음에 수원에 있습니까, 안양에 있습니까, 종합상담센터 아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콜센터를 말씀……

○**홍희덕 위원** 예, 콜센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애초의 취지가 뭐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노동부에 여러 가지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콜센터에서는 주로 전화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 부분을 1차적으로 걸러서 답변해 주는 것이 콜센터의 기능입니다.

○**홍희덕 위원** 예, 맞습니다. 전국에서 제기되는 전화 상담 및 인터넷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지요. 또한 시스템 구축비에만 20억 원이 들어가고 총 44억 1000만 원을 들여서 72명을 위탁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1월에는 그 시스템을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콜센터가 워낙 민원이 폭주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좀 확장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좀 반영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콜센터는 다른 대기업의 경우에 또 하나의 독립법인을 차려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더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콜센터를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민간 쪽에다가 대행을 시켜 가지고 민간기업에서 AS 응답하듯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만큼 질 높은 서비스를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우선 시작이 된 겁니다.

○**홍희덕 위원** 그런데 예산계획서를 보니까 오늘 예산안에 나와 있습니다만 장소 마련해 주지요, 또 관리비 대 주고, 시스템 구축해 주고……

위탁업체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뭐지요? 위탁업체에게 엄청난 이윤이 보장되더라고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홍희덕 위원**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72명에

대한 위탁사업비 13억 3000만 원은 너무 많습니다. 직접 고용하면 최소 5억 원은 절약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탁업체만 배불리게 되는 것 아니냐, 상담원을 기존에 있는 상담원처럼 직접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경험이 축적되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상담인 모두 이득이 될 것인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취소하실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좀 상세하게 다르게 설명드리려니까 시간이 충분치 못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계산해 볼 때 이것은 결코 민간기업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비용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할 경우에 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해 볼 때 이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해서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좀 부실한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분명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담을 하는 그런 민원 센터가 꼭 필요한데 하더라도 같은 예산 들이면 진짜 실력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 상용적인 일자리라도 좀 채용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관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단 운영이 되면 지금 현재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거기 연계돼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업무에 있어서 저하랄까 이런 것은 결코 생기지 않고 소비자에게는, 고객에게는 더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현재 안양에 있는 상담센터가 울산으로 이전할 계획은 맞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맞습니다.

○**홍희덕 위원** 현재 있는 기간제 상담원들 있지

요, 그렇지요?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홍희덕 위원** 2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홍희덕 위원** 아, 전환을 시킬 계획이고, 또 시켰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이미 시켰습니다.

○**홍희덕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장관님, 비정규직에 대한 17대 국회의 입법 취지는 여야가 합의로 비정규직에서 2년 동안 일을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리고 고용이 안정되면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가 있고 양극화도 좀 해소될 수가 있고 또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입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들을 실업하게 하는 대량실업의 사태를 예고한다라는 게 뭔가 타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 입법의 취지나 동기는 저는 참 좋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 때 보다 정교하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것을 막고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말하자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더 이상 기간제로는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쓰려면 정규직으로 써라라고 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아예 그 자리를 쓰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근로자로 대체해서 쓰겠다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고 실제로 그 사람들을 원래 법이 바라는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일은 극히 적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법에 충분히 순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으셨고요.

또 다른 하나 큰 문제는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았을 때 그러면 근로자는 어떻게 되느냐, 근로자 당신도 해고당할 수밖에 없다, 다른 직 찾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2년차에 대해서 사용

자가 쓰지 않을 때 결국 해고당하게 될 근로자에 대한 대책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점에서 취지는 좋으나 너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바로 우려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재운 위원** 그러면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7월이 되면 현재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가 일시에 해고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일시는 아니지요.

○**김재운 위원** 그렇지요, 일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일시는 아니고 저희들이 계산한 바로는 이미 2년차가 넘어가 가지고 이제 계약 갱신이 7월부터 이루어질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8월, 9월, 10월 이렇게 해서 적어도 6개월간 이루어져야 할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요.

뒤, 100만 명이 적다라고 합시다. 80만이든 그것은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러한 분들이 결국은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는 한은 회사를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향후 2년을 생각해 봅시다. 2년 동안은, 다 2년이 될 테니까 260만 명이 그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법률로는 2007년 7월 7일 이후에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지요.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분들은 계약을 하면 그분들 계약한 기간부터 또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시적으로 대량실업이 된다는 장관님의 주장은 맞지가 않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것은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김 위원님께 저희들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의심이 나시면 저희들에게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김재운 위원** 그리고 오히려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에게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고 촉구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역할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만약에 노동부의 취지대로 4년을 연장하면 4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우선 이제……

○**김재운 위원** 4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절대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4년을 연장하는 취지는 기간제 계약이라는 것을 그래도 인정을 하고 거기에 적절한 기간을 설정하자, 그 이상은 사용자가 고용할 수 없는 기간을 설정하자고 했을 때 어떤 기간이 가장 합리적이냐, 그럴 때 현실적으로 볼 때는 한 4년 정도가 가장 합리적이다……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년차에 대해서 일을 더 하고 싶은데 해고당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4년 동안 일했지 않았느냐, 당신이 4년 동안 볼 때 그것을 회사에 기대할 수 없었으니까 4년 동안 일한 경험을 가지고 다른 회사로 얼마든지 옮겨 갈 수 있는 자격 준비를 해야지 어떻게 그 회사에서 오로지 정규직 전환하기로만 목을 매달고 있느냐’, 그것은 근로자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년차 근로자보고 ‘너 다른 데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김재운 위원** 장관님 말씀대로 한다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계속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어느 기업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정부와, 그리고 또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추경 편성의 원칙이 국가재정법에 규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재정의 안전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예산들을 보면 일부는 과연 그렇게 추경 편성에 걸맞은가……

지금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사업비로 무려 470억 원을 증액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실습동 개축하고 교육훈련시설 개선하는 것인데 이게 추경 편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전반적으로 위기를 맞아 가지고 많은 SOC사업에 대한 투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SOC사업을 항간에는 강물 살리기 이런 데에만 하느냐, 오히려 교육 인프라를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도 많이 합니다.

사실 폴리텍은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교육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교육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이것은 역시 적절한……

○**김재운 위원** 그 취지에는 적극 동의를 하는데

요.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요.

추경 편성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유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리고 지금 일자리창출사업 평가시스템 운영사업비는 6억 원인데요.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리고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과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법적 근거가 없는 가운데 편성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했지만 여러 가지 노사협력의 차원에서 편성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추경을 한다는 것은 추경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 노사정위원회법에 보면 어떤 지역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을 내용을 가지고 지금과 같은 그런 지적은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김재운 위원** 추경원칙에 맞게끔 편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몇 분 지적했습니다마는 직업상담원을 증원하는 것이 장관님도 그건 동의하셨는데 이런 직업상담원을 증원하는 거야말로 맞죠. 지금같이 실업위기에 그리고 또 경제위기에 직업을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예산들은 증원을 해야겠죠. 또 근로감독관을 증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앞서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고용보험기금을 국가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원진 위원님.

○**조원진 위원** 장관님이 100만 명이라는 얘기는 제가 그것 때문에 통계를 계속 찾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3월 달, 우리가 3월, 8월 두 회에

걸쳐서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260만의 기간제 중에서 100만, 그러니까 재계약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또 스스로 나가는 사람을 제외하고 보니까 한 100만 되더라, 이게 실질적으로 2007년 7월 7일 그 시점에도 그랬고 그다음에 2008년 3월도 그랬고 2008년 8월에도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제 100만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00만이 6개월 동안 나눠 가지고 중간에 계약을 한다 말이죠. 그러면 2007년 7월 7일 이후에, 8월 달에 계약한 사람은 2009년 8월에 가서 2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근 6개월 정도를 보니까 한 100만 명 정도가 된다, 그래서 100만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과연 우리가 260만 중에서 정규직으로 그분들을 모시고 갈 수 있는 이 정부의 재정으로서의 한계가 과연 얼마 될까, 그것만 되면 다 쥐 가지고 정규직으로 기업하고 협의해서, 또 기업이 수출도 잘 되고 기업이 지금 잘 되면 정규직을 더 뽑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최악의 바닥에 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장관님하고 생각이, 저는 데이터를 계속 보면서 느낀 게 큰일났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두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빨리 이걸 노동계하고 정부하고 의논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저도 장관님이 100만이라는 얘기를 할 때 왜 데이터를 내지 않느냐고 여러 번 독촉을 했습니다만 그건 사실 정부 측이 잘못하신 거예요. 결국은 제가 뽑은 데이터를 봐도 아까 말씀드린 이 보험의 비자발 상실자가 53.2%, 자발 상실자가 46.8%로 2008년 평균에 비하면 비자발 상실자가 13.9%가 늘었습니다. 전체 보험의 피보험자격이 13.9%가 벌써 늘어나버린 거예요. 그만큼 해고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건 소리 없는 해고입니다. 어디 가서 변명도 못하고 어디 가서 항소도 못하고 항의도 못하는 그분들이 해고를 당했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여성, 노령자, 비정규직 순서대로 지금 해고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 그래서 환노위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걸 좀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정부도 심각하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

만 추가를 드리면 지금 사실 비정규직 문제를 조금 당사자의 입장이 아닌 그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문제를 다루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는 얘기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되더라도 다른 근로자가 들어와서 일자리를 채우니까 전체 총 고용에는 변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원래 그 비정규직으로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자고 한 법입니다. 그런데 왜 보호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자기가 얻은 일자리를 자기 잘못이 아닌 다른 이유로서 자리를 뺏겨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사용자가 갱신을 안 하면 그건 해고를 당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입니다만 사용자가 법 때문에 당신을 더 이상 고용할 수 없다고 할 때 그건 법이 그 근로자의 취업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헌법상에……

○조원진 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린 건 법을 만든 이 국회가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러니까요.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것은 해고당할 그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는 점을 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쌍용자동차에서 정리해고에 관한 계획이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마는 2600명입니다. 2600명 전체적인 비정규직 수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로 인식됩니다. 그건 거기에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고 법에, 자기들은 어떤 조직화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고당한 것에 대해서는 조용하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건 그렇지 않고, 장관 잠깐 만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래서 바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좀 중요하게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원진 위원 지금 어느 쪽에서 얘기하는 비정

규직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해직이 돼서 다시 직업을 가지지 않느냐, 또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가 생기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지만 해직된 7, 80만 가정들의 파탄이라든지 이 가정들의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해직을 당해 보면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한 가지는 비자발 상실자들이 다시 보증을 취득하는 율이 1년 이상이 됐는데도 취득하지 못하는 게 한 25% 정도가 됩니다, 25% 정도가. 그건 뭐냐면 해직되고 난 다음에 재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한 25%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데이터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70만이 해직이 됐다가 25%면 얼마입니까, 한 20만 명 정도가 재취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경제사정이 더 어려울 때. 이걸 경제상황이 그래도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한 몇 년간의 데이터인데 지금같이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는 재취업이 안 되는 율이 더욱더 커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가 보면 피보험단위기간 혜택을, 실업급여 혜택을 보려면 180일이죠, 그렇죠?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조원진 위원** 이 부분 사실은 일용직이라든지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들이 혜택을 보려고 그러면 한 120일 정도로 좀 줄여줘야 되겠다, 이걸 뭐냐면 지금 실업급여에 대한 혜택을 주는데 기존 실업급여 혜택을 받는 사람의 연장도 중요하지만, 기간 연장도 중요하지만 지금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도 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같이 연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한 2, 30만이 됩니다, 120일로 줄여주면. 그게 일용직 근로자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통계청에서 하는 노동공급 측의 통계자료는 우리가 있는데 노동부에서 지금 하는 노동수요 측의 통계자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노동성이 이 2개의 통계자료를 다 가지고 서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노동수요 측의 통계자료가 있으면 기업의 자료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몇 명이 있고 앞으로 비정규직 몇 사람을 더 뽑을 거고 정규직을 몇 사람 더 뽑을까, 그런 데이터들을 다 갖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이 90억이 많다면 많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

에 집어넣는 돈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장관님과 또 다른 생각을, 다른 측면에서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장관님의 대체토론 과정의 질문, 답변 이렇게 쪽 들어보니까 조금 기본적인 이해가 좀 궁금하다는 점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장관님은 지금의 비정규직들이 어떤 단체 결성을 하고 있지 않아서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비정규직을 위해서, 장관님의 소신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서 사용제한 기간을 연장한다는 법을 내셨다는 겁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그러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았습니까?

2년을 더 늘려서 4년으로 하겠다, 이렇게 찬성 여부를 물어보았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희들 안을 놓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설문을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委員長 秋美愛** 아니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장관님 혼자서 정말로……

○**노동부장관 이영희**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하고 또 한 80개 이상의 비정규직 사업장에 가서 직원들이 면담도 하고 지금 또 여러 언론기관에서 한 자료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저희들이 이 방안을 지금……

○**委員長 秋美愛**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에서 어차피 비정규직 보호를 포기한 마당에 왜 노동비용에 더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데, 모든 부분을 절약·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노임을 적게 주는 방향으로 당연히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비정규직을 대체하는 것이 또 다른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사실은 정규직일 겁니다. 정규직 따로 있고 비정규직 따로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마 정말로는 우리 노동시장의 기본 룰이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원칙으로 설정이 되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노동을 보호해야 될 부처가 노동보호를 포기하는 데 너무나 지

나치게 앞장선다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아까 통계를 많이 인용을 하는 질의도 있었고 장관님도 통계에 대해서 ‘독자적인 통계는 하고 있지는 않으나’,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며칠 전입니다.

4월 14일 화요일 한국일보 신문에 ‘비정규직보호법 부작용이 더 컸다’ 하는 제목에 소제목이 ‘비정규직 질 나은 일자리는 64만 개 줄고 정규직으로 전환은 4만 4000개에 그쳤다’라는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委員長 秋美愛** 거기에는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마치 홍보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연구원에 위탁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통계를 읽지 못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입맛대로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말로 비정규직보호법 이후에 정규직 전환으로는 4만 4000개에 그쳤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민간기업 부문에 대해서 얼마나 정규직으로 전환됐는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委員長 秋美愛** 이 기사 내용이 맞습니까, 장관님?

○**노동부장관 이영희** 이 기사는 말이죠, 저희가 노동연구원에 시킨 것이 아니고 노동연구원 연구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그러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맞는 기사입니까? 정확한 기사입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이걸 100% 다 맞다, 이렇게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 연구원이……

○**委員長 秋美愛** 동의하십니까, 이 기사 내용에?

○**노동부장관 이영희** 대체로 전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가서 한번 보십시오.

아마 저는 이것이 일부러 입맛대로 왜곡하는 노동부의 대표적인, 이것 책임도 지지 않는, 노동부가 시킨 것도 아니다, 임의적으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노동부가…… 지금 제가 다시 알려드리고 동의를 하시느냐 여쭙었는데도 대체로 맞다 하시는데 100% 틀렸어요.

왜? 지금 기사에 인용된 도표가 하나 있습니

다. 그 도표를 보시면 정규직은 이 조사기간 동안에, 통계를 본 기간 동안에 39만 7600명, 약 40만 명의 정규직이 늘었어요. 그 정규직 어디서 왔습니까? 비정규직에서는 옮겨온 거죠. 비정규직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반대로 비정규직은 줄었어요. 13만 53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소제목에는 어디서 근거가 있는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전문가 아닌 다음에 다 보지를 못해요. 표까지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제목에는 정규직 전환으로 고작 4만 4000밖에 안 됐다, 그래서 법이 있으나마나다, 그래서 법을 고쳐야 된다, 그런 뻔한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왜곡하는 기사 아닙니까? 이것 노동부가 정말 장관님 말씀처럼 비정규직을 대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대변하시는 거라면 이것부터 노동부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 저는 봅니다.

다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뒤에서……

○**노동부장관 이영희**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대체 이런 자료를 굳이 그렇게 왜곡해서까지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아니, 그러면 노동부 입장을 한번, 이 기사를 지금 급하게 그러실 것은 없는 것 같고 노동부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교를 하려면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통계를 한번 내 보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그 통계를 낼 시간이 없다 하시면 통계청 통계부터도 좀 똑바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려면 해마다 비정규직 전환이 어느 정도로 이어져 왔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같은 자료를 제가 한번 보니까, 통계청 자료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가장 최근 조사인 2008년 8월 조사를 보니까 통계청 자료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정규직은 조사 이래 최대 규모인 48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제 눈에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모아 놓고 그것을 보시면 제 얘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반대로 비정규직은 가장 큰 규모인 26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자꾸 법안 내놓으시고 의도대로 홍보하는 차원으로 가지 마시고 진정으로 노동을 보호하는 부처의 입장을 좀더 확고하

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더 설명드리기보다도 충분한 저희들 입장을 설명드리는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아니, 언론을 통해서 한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서서는 지난 10일에 있었던 국회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비정규직 사용 기간 4년의 근거로, 현행 2년을 4년으로 하겠다는 근거로 “노동부가 한 연구기관에 의뢰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율이 2년 4개월 근무한 비정규직은 13%밖에 안 된 반면에 4년 4개월 근무자는 63%에 달했다”라며 “그만큼 고용기간이 길고 관계가 가깝게 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커지므로 4년으로 법을 고치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委員長 秋美愛** 정말 비정규직이 근무를 더 오래 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율이 높아집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실제로 그 현실적인 자료에 의해서, 그것은 KDI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그러면 노동부가 똑바로 보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은, 4년 4개월은 이미 한 번 반복 갱신이 되는 겁니다, 계약이.

○**노동부장관 이영희** 한 번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 차례 되는 겁니다.

○**委員長 秋美愛** 여러 차례 되겠지요. 그러니까 반복 갱신이 되면, 법이 보호를 안 해 주니까 판례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관님은 자꾸……

○**노동부장관 이영희** 아닙니다, 그것은.

○**委員長 秋美愛** 100만이 7월에 생긴다고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그 100만 중에도 판례법에 의해서, 노동부가 이미 포기한 것을, 법으로 포기하겠다는 근로자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 판례가 반복 갱신 계약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판례가 인정하는 것을, 판례법으로 인정된 것을 현실적인 법으로마저 안 하겠다, 포기를 하겠다? 그것이 정말 노동을 보호하는 부처입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 반복……

○**委員長 秋美愛**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아닙니다, 이것 반복 갱신을 무조건 판례가 다 인정한 것은 아니고 반복 갱신 가운데에서 정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무기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한 것이고……

○**委員長 秋美愛** 그러니까 그것이 들어가 있는데, 통계에는 그것이 녹아 있는데 장관님은 그 통계를 역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입장을 강변하기 위해서?

○**노동부장관 이영희** 아니, 천만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그러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든지, 분석적으로 말씀을 하시든지.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일방적인 주장을 잘 늘어놓는지……

또 비정규직이 우리나라에 800만인데 장관님 입장은 경제력으로 해결한다? 경제력으로 이보다 더 어려운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초근목피로 때울 때가 60년, 70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노동운동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일깨워지면서, 민주화되면서 제도화시켜 놓은 것인데 그 제도화를 지금 역행하고 후퇴시키겠다……

지금 옛날보다 훨씬 잘살고 있지 않습니까? IMF 때보다 지금이 그래도 좀더 잘산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전체 경제적으로는 임팩트가 워낙 커서 어렵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IMF 때는 급박한 쇼크가 왔다면 지금은 정말 서서히 조여 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충격이 덜하다면 노동 보호에 대한 정책도 좀 세심하게 가야 될 텐데 어찌해서 노동부가 제일 먼저 발 빠르게 앞장서고, 집권 여당마저도 노동부 제안의 법은 받지 못하겠다 하시면, 다시 한번 자세 전환하시기를 촉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예.

○**조원진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말이지요. 그만큼 자료가 중요한 겁니다. 자료를 좀 만드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 위원 분들한테 다들 좀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秋美愛**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노동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

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일괄하여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환경부 및 노동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노동부 소관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 시 오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논의하시고 제기해 주신 내용을 잘 수렴하셔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소위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환경부 및 노동부 소관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동부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 | | | |
|-----|-----|-----|-----|
| 강성천 | 권선택 | 김상희 | 김재윤 |
| 박대해 | 박준선 | 이두아 | 이화수 |
| 조원진 | 조해진 | 추미애 | 홍희덕 |

○출석 전문위원

| | |
|--------|-----|
| 수석전문위원 | 이병길 |
| 전문위원 | 원창희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 | | | |
|---------|-----|--|--|
| 환경부 | | | |
| 장관 | 이만희 | | |
| 차관 | 이병욱 | | |
| 기획조정실장 | 문정호 | | |
| 자연보전국장 | 김지태 | | |
| 자원순환국장 | 정연만 | | |
| 환경정책실장 | 홍준석 | | |
| 물환경정책국장 | 윤승준 | | |
| 기후대기정책관 | 윤중수 | | |
| 상하수도정책관 | 김종천 | | |
| 녹색환경정책관 | 안문수 | | |
| 노동부 | | | |
| 장관 | 이영희 | | |
| 차관 | 정종수 | | |

| | |
|--------------|-----|
| 기획조정실장 | 송영중 |
| 고용정책실장 | 신영철 |
| 노사협력정책국장 | 이채필 |
| 근로기준국장 | 이기권 |
| 산업안전보건국장 | 정현욱 |
| 정책기획관 | 정철균 |
| 국제협력관 | 이성기 |
| 고용정책관 | 이재갑 |
| 직업능력정책관 | 조정호 |
| 고용평등정책관 | 허원용 |
| 고용서비스기획관 | 이우룡 |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 엄홍우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 김원배 |
|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사장 | 허병기 |

【보고사항】

○의안 회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해결 의원 대표발의)

(2009. 3. 24 정해결 · 김우남 · 김성수 · 김태원 · 임동규 · 정희수 · 임해규 · 손범규 · 이한성 · 안상수 · 임영호 · 박민식 · 정영희 · 김성순 · 이정선 · 유성엽 · 이화수 · 이춘식 · 임두성 · 이해봉 · 김재윤 · 정갑윤 · 김영진 · 이인기 · 이철우 · 유재중 · 강석호 · 최구식 의원 발의)
3월 25일 회부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09. 3. 25 김동철 · 김우남 · 박기춘 · 최인기 · 문학진 · 이광재 · 김재윤 · 김효석 · 김종률 · 양승조 · 홍재형 · 박은수 · 김재균 · 김영진 · 우제창 · 신낙균 의원 발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철국 의원 대표발의)

(2009. 3. 25 최철국 · 전현희 · 김춘진 · 최문순 · 이종걸 · 이석현 · 안민석 · 김영진 · 우윤근 · 주승용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6일 회부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2009. 3. 26 김재윤 · 강성천 · 강창일 · 김상희 · 김우남 · 김성순 · 김영진 · 김재균 · 김종률 · 김춘진 · 안민석 · 양승조 · 우제창 · 이용섭 · 이정희 · 이화수 · 추미애 · 홍희덕 의원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

(2009. 3. 26 김재운·강성천·강창일·김상희·김우남·김성순·김영진·김재균·김종률·박은수·안민석·양승조·우제창·유원일·이광재·이미경·이용경·이용섭·김성수·홍희덕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7일 회부됨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2009. 3. 31 송영길·김우남·강창일·양승조·김종률·홍재형·전병현·이윤석·유성엽·우제창·송민순·강기정·백원우·전현희·전혜숙·김충조·박은수·박기춘·김효재·김영진·김진표 의원 발의)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

(2009. 3. 31 정부 제출)

이상 2건 4월 1일 회부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09. 4. 1 정부 제출)

이상 2건 4월 2일 회부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2009. 4. 3 조해진·정두언·이춘식·권택기·김효재·김영우·장광근·강승규·백성운·나경원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

(2009. 4. 3 박은수·송민순·최철국·양승조·송영길·백원우·최영희·강명순·이미경·전현희·곽정숙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

(2009. 4. 3 박은수·송민순·최철국·양승조·송영길·백원우·최영희·강명순·이미경·전현희·곽정숙 의원 발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

(2009. 4. 3 박은수·송민순·최철국·양승조·송영길·백원우·최영희·강명순·이미경·전현희·곽정숙 의원 발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2009. 4. 3 조원진·강성천·박대해·박준선·이두아·이명규·이윤성·이화수·정진섭·조해진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2009. 4. 3 조원진·강성천·박대해·박준선·송광호·유승민·유재중·이두아·이명규·이윤성·이진복·이화수·정진섭 의원 발의)

이상 6건 4월 6일 회부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

(2009. 4. 6 이화수·이춘식·정해걸·강성천·노철래·김우남·정진섭·정갑윤·박민식·이계진·박준선·신상진·송훈석·조원진 의원 발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성천 의원 대표발의)

(2009. 4. 6 강성천·이화수·김재운·정진섭·김성태·조원진·정미경·현기환·김소남·임두성·신상진·이정선·권선택·김부겸·안효대·김상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7일 회부됨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종희 의원 대표발의)

(2009. 4. 10 박종희·고승덕·서청원·손범규·황영철·신상진·박준선·황우여·유성엽·박순자 의원 발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성천 의원 대표발의)

(2009. 4. 10 강성천·권영길·김옥이·강석호·이정선·조원진·원희목·현기환·이경재·송훈석·이인기·이화수·김성태·오제세·임동규·권택기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3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봉 의원 대표발의)

(2009. 3. 31 이해봉·이병석·조원진·서상기·김효재·백성운·안상수·배영식·손범규·유승민·조진래·조문환·김용구·주호영·홍사덕·주성영·김옥이·여상규·강석호·김충환·김종률·장광근·이명규·김성수·정희수·정해걸·송광호·김성곤·현기환·허천·권선택·김창수·이명수·이상민·이재선·김낙성·류근찬·임영호·심대평·

박상돈 · 이용희 · 유정복 · 이한구 · 이철우 ·
이진삼 · 전여옥 · 성윤환 · 정의화 · 장윤석 ·
김성조 · 박종근 · 이한성 · 이두아 의원 발의)
4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공성진 의원 대표발
의)

(2009. 3. 16 공성진 · 고승덕 · 김성수 · 김소남 ·
신영수 · 안상수 · 안효대 · 원희목 · 유성엽 ·
이한성 · 이해봉 · 임영호 · 정영희 · 정혜결 의
원 발의)

4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